www.kicce.re.kr

2015년도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자료집

KICCE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5 육아정책연구소 해외정보수집원

국가	성명
독일	이윤승
	양영임
미국	우문주
스웨덴	김윤환
일본	이소연
캐나다	강현구
프랑스	김은준

www.kicce.re.kr

2015년도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자료집

KICCE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Contents

2015년도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일본 ····· 3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및 정책 ····· 3
육아지원 관련 ····· 5
일·가족 양립 정책 ····· 9
취약계층 양육지원 ····· 11
기타 ····· 13

미국 ····· 15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및 정책 ····· 15
교육·보육 비용 ····· 19
일·가족 양립 정책 ····· 22
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 ····· 24
교사 ····· 29
기타 ····· 31

캐나다 ····· 33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및 정책 ····· 33
교육·보육 비용 ····· 41
일·가족 양립 정책 ····· 49
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 ····· 51

프랑스 ····· 53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및 정책 ····· 53
교육 및 보육 비용 ····· 57
육아지원 관련 ····· 58
일·가족 양립 정책 ····· 60
기타 ····· 60

Contents

독일 ····· 63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및 정책 ····· 63
교육·보육 비용 ····· 65
육아지원 관련 ····· 67
기타 ····· 69

스웨덴 ····· 71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및 정책 ····· 71
교육·보육 비용 ····· 73
일·가족 양립 정책 ····· 74
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 ····· 76
교사 ····· 79

기타 북유럽: 스위스, 벨기에 ····· 85

2015년도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목록 및 조회 분석 ····· 86

2015년도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국가별, 주제별)

일본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및 정책

1. 나가노현, '신슈(信州)형 자연보육' 도입

2015년 4월부터 나가노현은 야외 체험활동을 중시하는 이른바 '신슈*(信州)형 자연보육' 인정제도를 도입한다. 활동 시간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보육소나 유치원을 현 지사가 승인하는 제도로 전국적으로도 보기 드문 시도이다. 나가노현의 우수한 육아 환경을 널리 홍보해 이주민 증가에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2014년 4월부터 전문가와 민간단체, 보육원, 유치원 관계자들이 검토위원회를 구성, 논의를 해왔으며 3월 17일에 열렸던 제7차 회의에서 제도의 실시요강과 승인기준이 마련되었다.

풍부한 자연환경 속에서 유아기를 보내는 것이 감수성과 주체성, 창의성, 사회성 발달에 일조한다는 생각에서이다. 예를 들어, 진흙 놀이나 모닥불 놀이, 꽃따기, 곤충 채집,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 보내기 등의 체험이 모두 '자연보육'에 해당한다.

승인 기준은 크게 둘로 나뉜다. 보육시간의 대부분을 야외에서 보내는 등 질적, 양적으로 모두 자연보육 중심의 '특화형'과 다른 보육프로그램과 접목시킨 '보급형'이 있다. 3세 이상 아동의 야외 체험활동을 '특화형'은 1주일간 총 15시간 이상을, '보급형'은 총 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그 외에도 보육사 수나 외부 연구활동 참여도, 응급치료법 수강과 같은 활동의 질과 안전관리 등을 중시한 24개의 기준을 설정했다. 내달부터 시정촌과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 뒤, 6월 1일부터는 승인 신청을 받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보육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도자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학부모를 비롯한 어른들도 자연을 통한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한편, 우에하라 타카오(上原貴夫) 위원장은 '(자연보육의 제도화가) 아이들 성장의 근원이 될 것이며 학부모도 다양한 선택지를 고를 수 있다'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신슈: 나가노현의 또 다른 이름

아사히 신문 2015년 3월 18일자
기사출처: http://www.asahi.com/articles/ASH3K5JHRH3KUOOB00X.html

2. 인정어린이집 보급 추진

‘어린이·육아지원신제도’는 유치원과 보육소 기능을 통합한 인정어린이원을 미취학 아동을 위한 중심 시설로 삼고 있다.

인정어린이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부모의 취업 여부와 관계 없이 동등한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다. 인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인정어린이원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4월부터 아키타 시의 세레여자단대 부속유치원은 인정어린이원으로 변신해 3~5세 원아 80명과 0~2세 아동 8명을 추가적으로 맡게 된다. 건물 2층을 새단장 한 후 2층은 0~2세 아동이, 1층은 3세 이상 원아가 이용하도록 하며 설치가 의무화된 급식실도 마련했다.

이 유치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무라야마 사무국장은 ‘저출산으로 원아가 점점 줄어 경영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반면,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저연령층 아동의 보육 수요는 높아 유치원과 보육소의 통합형인 인정어린이원으로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육시간은 오후 6시 반까지, 유치원의 경우 오후 2시까지 운영하며 강당에서 하는 음악활동이나 운동회 등의 행사도 저연령층 아동과 원아가 함께하는 형태로 실시된다. 무라야마 사무국장은 ‘0세부터 일관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연령층이 다른 아이들이 집단보육을 통해 사회성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아키타현은 유아 교육 확충을 위해 유치원과 보육소를 인정어린이원으로 바꾸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도에는 53개의 인정어린이원을 세울 예정이며 2020년도에는 68개로 확충하겠다는 목표이다.

이러한 인정어린이원 증설이 대기아동문제 해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한편, 도시부를 중심으로 과제도 남아 있다.

요미우리 신문 2015년 3월 31일자
기사출처: www.yomiuri.co.jp/komachi/.../20150330-OYT8T50045.html

육아지원 관련

1. 야마구치현, '생후 2주간 건강진단'으로 신생아와 산모의 심신 지원

야마구치현 우베 시(宇部市)는 2015년 4월부터 신생아와 산모의 심신(心身)을 지원하는 '생후 2주간 건강진단'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지역의 저출산 대책 강화 교부금을 활용한 지원 서비스로 야마구치현 내 최초의 제도이다.

지금까지 영유아 건강진단은 생후 1개월이 지난 유아가 대상이었다. 생후2주간건강진단은 산부인과에서 제공한 퇴원 당시의 정보를 바탕으로 소아과에서 신생아의 발육, 발달을 진단하고 산모에게 조언을 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생후 21일까지의 신생아와 산모가 대상이며, 진료비는 무료이다. 산모가 산부인과에서 '산부인과 퇴원 시 정보제출서'와 '생후2주간건강심사 진찰권'을 수령한 뒤, 우베 시 내 13개 소아과에서 진찰을 받을 수 있다. 우베 시는 2016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마이니치 신문 2015년 5월 12일자
기사출처: http://mainichi.jp/area/yamaguchi/news/20150512ddlk35100508000c.html

2. 가고시마현 아이라시, 육아지원 확충: 0~5세 아동 증가에 대응

가고시마현 아이라 시(姶良市)가 육아 지원 확충에 힘을 쏟는다. 지난 15일에 열린 시의회 정기회의에서 대기아동 해소를 위해 인가보육소 정원을 약 30명 늘리는 시설정비보조금 약 1억 엔을 담은 2015년도 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달 24일에는 6번째 지역 육아지원센터를 개원한다.

아이라 시에 따르면 2015년 4월 1일 현재, 인가보육소는 총 25개, 정원은 1,637명이다. 대기아동은 29명이다. 이 중 0~5세 아동은 2010년 3,912명에서 2014년에는 4,102명으로 증가했다. 가고시마 도심과 인접해있고 베드타운으로써 젊은 세대의 전입이 많기 때문이다.

아이라 시는 2011~2014년도에 6개의 인가보육소를 신설하고 증축, 보수비용을 지원하여 총 206명의 추가 정원을 확보했다. 또한 시가지에 있는 인가보육소 이전을 지원, 정원을 현재 29명에서 6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원금 총 1억 1835만 엔 중, 정부가 1억 529만 엔을, 시가 1315만 엔을 부담했으며 2016년 봄 개원을 목표로 삼고 있다.

24일에는 가지키 보건 센터 내에 있는 지역 육아지원센터 '가지키즈'가 문을 연다. 미취학아동과 학부모, 임산부들이 교류하는 곳으로 출산과 육아에 관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한다.

아사히 신문 2015년 6월 24일 자
기사출처: http://www.asahi.com/articles/ASH694TYKH69TLTB00T.html

3. 나가노 시, 정기 응원 메일로 출산과 육아 정보 제공

나가노 시(長野市)가 임산부와 영유아 부모에게 출산 및 육아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이메일 서비스 '나가노 와쿠와쿠 육아 메일'을 도입했다. 나가노 시가 2015년 우선사업으로 삼고 있는 '지역 인구 증가를 위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안심하고 출산, 육아에 힘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메일은 두 종류로, 임산부와 그 가족을 위한 '임신 메일'과 0~6세 자녀를 키우는 부모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산후·육아 응원 메일'로 구성된다. 주로 임신과 출산, 육아에 관한 기초 지식과 육아 관련 조언, 산후 건강관리법 등을 제공하며 의사, 조산사, 영양사 등 전문가들의 감수를 통해 작성했다. 그 외에도 육아 관련 각종 강습회나 육아 상담 창구, 지역 육아지원센터의 정보도 제공한다.

등록은 무료로 가능하다. 시는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가족이 함께 신청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신청 방식 등을 기재한 전단지를 시청과 보육센터, 보육소, 유치원 등에 배부하고 있다.

산케이 신문 2015년 7월 30일 자
기사출처: http://www.sankei.com/region/news/150730/rgn1507300066-n1.html

4. 와카야마 시(和歌山市), 육아 지원 어플리케이션 개발

와카야마 시(和歌山市)가 저출산 대책으로 육아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연내에 개발한다. 자녀의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영유아 건강진단과 예방접종 일정 정보가 제공되는 시스템이다. 시 육아지원과에 따르면 현 내 지자체 중 최초의 시도라고 한다.

와카야마 시는 2011년부터 홈페이지 '육아지원 사이트 츠레모테'를 개설, 지역 육아 지원 행사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 홈페이지 방문 건수가 연간 약 3만 6천 건에 이르지만 그 중 약 80%가 휴대전화나 태블릿 PC에서 접속한다는 점에서 전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검토해 왔다.

새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건강진단 등의 정보 외에도 GPS (위성 항법 장치)를 활용해 가까운 유치원이나 보육원과 같은 육아 관련시설을 검색할 수 있다.

시는 9월 추경예산안에 개발비 540만 엔을 편성하고, 민간사업자에게 개발을 위탁할 예정이다. 한편, 육아지원과 담당자는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정보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시의 육아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설명했다.

아사히 신문 2015년 8월 18일자
기사출처: http://digital.asahi.com/articles/ASH8G5G1BH8GPXLB00Q.html

5. 오사카 마쓰하라 시 다자녀 가정에 1만엔 쿠폰 혜택

오사카 마쓰하라 시(松原市)는 2015년 11월, '다자녀 가정 교육 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자녀를 3명 이상 둔 시내 다자녀 가정에 학원이나 문화·스포츠 교실, 학습지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만 엔 상당의 쿠폰을 제공하는 것으로,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자녀의 학습 의욕 향상이 목적이다. 오사카 시(大阪市), 치바 현 미나미보소 시(千葉県南房総市)에 이어 전국 3번째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사업 예산은 정부의 지방 창생 교부금 1800만 엔과 마쓰하라 시의 재원 500만 엔을 합친 총 2300만 엔으로 충당한다. 천 엔 쿠폰을 10장 묶음으로 제공하며 유효기간은 1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다. 지급 대상은 자녀가 3명 이상이며 그 중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가구이다. 시는 이미 대상 가구(약 1500 가구)에 신청서 등을 송부했으며 이달 25일까지 신청서를 받은 뒤, 10월 하순에 신청 가구에 지급할 예정이다.

쿠폰은 시내의 학원, 문화·스포츠 교실과 같은 사교육비 및 학습지 구입비, 자격증 수험료 등으로 쓸 수 있다. 문화·스포츠 교실은 시내 음악, 서예, 주산, 컴퓨터, 수영, 체조, 댄스 교실 등이다.

한편, 마쓰하라 시는 올 11월부터 유치원과 보육소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만 엔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산케이 신문 2015년 9월 24일자
기사출처: http://www.sankei.com/west/news/150921/wst1509210059-n1.html

6. 결혼과 육아 '좋아요!' 페이스북을 통해 젊은 세대와 소통

일본에서는 대학생이 결혼과 육아에 관한 경험을 취재하는 '결혼, 출산, 육아란 정말 즐거워!를 조사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를 페이스북으로 알리는 것 외에도 책을 출간하고 2016년 2월 세미나도 한차례 개최할 예정이다.

프로젝트는 현(県) 사업 중 하나로, 대학생 등 청년층에게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2015년 10월, 현 내 대학생 남녀 12명이 편집부를 구성했고 주 1회 편집회의를 통해 운영방침을 정한다. 21일에는 개그 콤비 '다이노지'를 초청해 육아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듣게된다.

편집부 페이스북은 '질문 20개'를 제목으로 20대가 갖고 있는 궁금증에 대해 주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나 편집부 메시지 등을 소개한다. 예를 들어, '저도 정말 결혼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에 대해 남성의 생애 미혼율과 같은 데이터 통계를 제시한다.

편집부 부원인 마쓰이 요시후미 (松井未史, 미야자키대학 사업구상 학부 3학년, 21)씨는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결혼과 출산의 긍정적인 면을 소개하고 싶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같은 학부 부원인 이가라시 아리사(五十嵐有沙, 21) 씨는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요미우리 신문 2015년 11월 15일자
기사출처: http://www.yomiuri.co.jp/local/miyagi/news/20151114-OYTNT50405.html

7. 육아지원을 위한 주택보조금 지급, 내년 1월부터

일본 국토 교통성은 2016년 1월부터 3대가 함께 사는 집을 지을 때 공사비를 보조해 주는 제도를 발표했다. 또한, 2016년부터 3대가 함께 살기 위해 주택을 개조할 경우, 비용 일부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3대가 함께 살면서 육아나 간병을 가족끼리 서로 지원함으로써, 사회 보장에 필요한 공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한 집에 주방, 욕실, 화장실, 현관 중 2곳 이상이 여러 개 있는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우선, 이르면 내년 1월 이후에 건설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건설비의 절반을 보조해 주는 제도를 마련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100만엔대로 잡을 계획이어서 전액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016년 정기 국회에 제출할 2015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에 100억엔 정도를 편성할 예정이다.

한편 2016년도 세제 개정을 통해 3대 동거를 위해 주방이나 욕실 등을 확장한 경우, 해당하는 공사비의 10%를 세금에서 줄여주는 소득세 감세도 시행한다. 공사비 상한 금액은 250만 엔이다.

또한 돌봄이나 생활 관련 상담을 하는 「노인용 서비스 주택」 건설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상한액은 건물당 약 100만 엔에서 120만 엔으로 늘릴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개호 이직 제로」를 위한 개호 서비스 대상 증가를 내걸고 있으며, 보조금 확충을 통해 제도의 신속한 정비를 도모할 계획이다.

아사히 신문 2015년 12월 18일자
기사출처:http://digital.asahi.com/articles/ASHDJ3170HDJUBQU00C.html?_requesturl=articles%2FASHDJ3170HDJUBQU00C.html&rm=548

일·가족 양립 정책

1. 육아지원을 위한 주택보조금 지급, 내년 1월부터

지자체와 기업이 육아에 적극적인 남성, 이른바 '이쿠맨'을 지원하는 활동이 최근 치바현(千葉県)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안심하고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여성의 사회 진출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향후 이러한 시도는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치바현이 8월에 시작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치바 마이스타일 다이어리'에는 아버지로서의 마음가짐을 나타내는 문구가 담겨있다. '우선 아빠가 될 준비가 필수! 훌륭한 아빠가 될 준비를 합시다.'

현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용하던 애플리케이션에 남성들을 위한 내용을 추가, 배포했다. 3단계의 프로그램, 총 86개의 미션으로 구성, '출산휴가에 대해 엄마와 대화하자', '엄마의 상태와 임신에 대해 배우자'같은 육아에 관한 기사를 읽으면 '레벨'이 올라가는 방식이며, 즐기면서 아버지의 역할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

이쿠맨 수첩 배포

또한 치바 시에서는 2012년 1월부터 '육아맨 수첩 (이쿠맨 핸드북)'을 배포했다.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시도로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총 4만 5천 권을 제작했다. 그림과 함께 목욕과 기저귀 가는 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며, 육아 상담 센터의 연락처 등도 기록되어있다.

이쿠맨 양성 강좌 개최에도 적극적인 치바 시는 이달부터 4개월 연속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아빠 스쿨'을 개최,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육아는 부부가 함께 하는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산케이 신문 2015년 9월 7일자
기사출처: http://www.sankei.com/region/news/150907/rgn1509070044-n1.html

2. 손자, 손녀를 위해. 조부모 육아휴직제도 등장: 기업이 도입, 지자체가 지원

손자, 손녀를 위해 조부모가 직장을 쉴 수 있는 휴가제도를 도입하는 일본기업이 등장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보육소 등 육아 지원이 부족한 가운데 조부모에게 육아를 의지하는 사람이 많다. 조부모의 일과 생활의 조화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시대가 도래한 듯하다.

도호은행 (후쿠시마 시)에서 개인 융자 사무를 담당하는 다카노 후미코(59) 씨는 이 달, 도호은행이 2015년부터 도입한 '이쿠마고휴가' 제도' (손자, 손녀를 돌보기 위해 조부모가 휴가를 낼 수 있는 제도)를 사용해 11일간의 휴가를 받았다. 셋째 아이를 출산한 딸의 몸상태가 안 좋아졌기 때문이다. 바쁜 사위 대신에 초등학생인 첫째, 둘째 손녀를 돌봤다. 다카노 씨는 '손녀들과 많은 시간을 유익하게 보냈다. 이런 제도가 있으면 상사에게도 말하기가 편해 쉽게 쉴 수 있다'고 말한다.

도호은행은 2015년 4월, 유급휴가를 최대 120일까지 모아서 간병이나 가족 행사 등 손자, 손녀를 위해 쓸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이용한 여성 사원 6명 중 5명이 딸의 둘째 아이 이후의 출산을 이유로 최장 1개월의 휴가를 받았다. 은행 인사 담당자는 '조부모의 도움이 있으면 아이를 낳기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말한다.

다이이치 생명보험(도쿄)도 2006년, 손자가 태어날 시 휴가를 도입, 작년에는 약 870명이 휴가를 받았다. 이러한 휴가는 유능한 사원의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

왜 손자, 손녀를 위한 휴가가 등장한 걸까? 가족문제연구가인 아소 마리코 (麻生マリ子) 씨는 '보육소 정비가 불충분한 데다가 출산 직후나 급작스런 질병 등 돌발 상황에 대응해 줄 시설이나 서비스가 부족하다. 결국 조부모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지적한다.

기업에서 정년까지 일하는 여성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재고용제도로 정년 후에도 일하길 원하는 사람도 많다. 총무성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2014년 여성의 취업률은 55~59세가 66%, 60~61세가 48%로 30년 전에 비해 각각 17%포인트, 10%포인트 상승했다. 또한 단카이(일본 베이비붐 세대)이후 세대들은 이전 세대보다도 손자를 돌보는 데 호의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후생노동성은 2014년 가을, 기업이 마련한 일과 육아의 병행을 지원하기 위한 행동계획지침에 손자, 손녀 출산 시에 휴가제도를 창설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후쿠이 현(岡山県)과 오카야마 현(岡山県) 은 올해, 휴가 취득 촉진을 위해 기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 한 관계자는 '사회전체가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 조부모의 휴가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한다.

조모의 워크 라이프 밸런스가 점점 중시되고 있다. 올 봄, 간토 지역에 사는 한 60대 초반 여성은 두 딸의 출산이 겹쳐 어쩔 수 없이 일을 포기했다. 아소 씨는 '사위의 전근이나 이혼으로 손주를 돌보게 되어 일을 그만둘 수 밖에 없는 경우도 많다. 손자, 손녀 돌보기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서로 협력할 부분을 이야기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요미우리 신문 2015년 11월 4일자
기사출처: http://www.yomiuri.co.jp/komachi/news/20151028-OYT8T50039.html

취약계층 양육지원

1. 치바현, 한부모 가정 자녀의 학습지원 확충

치바현 지자체가 한부모 가정 자녀에 대한 학습지원을 확충하고 있다. 대학생과 퇴직한 교사들이 무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진학 등에 관한 상담에도 응한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한부모 가정 자녀의 학습을 지원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목적에서다.

10월 6일 치바현 후나바시시(船橋市) 내의 한 시설에서 30여명의 중학생들이 수학과 영어, 국어 등 문제집을 풀고 있다. 교사 한 명이 2, 3명의 학생을 담당, 지도한다.

후나바시시가 작년부터 도입한 한부모 가정 학습지원 사업은 주로 아동부양수당을 지급받는 한부모 가정 중학생이 대상이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주1회(시험 한달 전에는 주2회) 오후 6시~8시에 수업을 실시한다.

강사는 교육학과 심리학을 배운 대학생이나 퇴직한 교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다. 학생들은 교과서나 문제집 등 희망하는 교과의 교재를 가져올 수 있다. 올해는 약 110명이 수강신청을 했다.

중학생 3학년의 한 수강생은 '학교 수업에서 몰랐던 부분을 물어볼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한편, 치바현 카시와시(柏市)에서는 8월부터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비슷한 학습지

원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시 담당자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며 학부모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2014년 8월 치바현이 현내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정부에게 원하는 시책으로 '학습지원사업'을 꼽는 사람이 '대부금사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현은 올해 학습지원에 적극적인 시정촌에 대해 국가 보조금을 추가한 보조제도를 마련한다. 8월에 발표한 '현 한부모 가정 등 후레아이(ふれあい) 서포트플랜'의 제 3기 계획에도 학습지원 추진방안을 담았다. 한편, 한부모 가정은 부모가 아르바이트 같은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빈곤율이 높기 때문에 학습과 진학 의욕 저하가 우려된다고 한다.

2010년 조사에 따르면 현내 한부모 가정은 5만 1257가구로, 치바현 아동가정과 담당자는 '학습지원을 확충해 아이들이 희망하는 진로를 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끊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아사히 신문 2015년 10월 17일자
기사출처:http://digital.asahi.com/articles/ASHBG6SN4HBGUDCB01K.html?_requesturl=articles%2FASHBG6SN4HBGUDCB01K.html&rm=215

2. 보육·교육 무상 확대. 저소득층 셋째 아이부터 전액 지원

일본 정부가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지원책으로 셋째 아이부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육료를 전액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무상 교육 대상을 확대해 육아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을 해소하겠다는 목적이다.

현행 제도는 자녀를 보육원에 보내는 경우,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전이라면 둘째의 보육료를 반값으로, 셋째 이후는 무료이다. 예를 들어,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둘째는 반값에서 전액 부담, 셋째도 무료에서 반값으로 부담이 커지는 구조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연봉 330만엔 이하 가구라면 첫째 아이 학년과 관계없이 둘째의 보육료는 모두 반값으로, 셋째부터는 무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유치원에 다니는 가구도 현행 제도로는 첫째가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인 경우, 둘째 보육료가 반값, 셋째부터 무료이지만, 이 경우도 연봉 360만 엔 이하인 가구에 한해 첫째 아이의 학년에 상관없이 지원 대상으로 삼는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보육원의 경우, 현재 약 52만명 이상의 원아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 필요한 정부 및 지자체 지출액은 보육원이 약 370억 엔, 유치원이 약 55억 엔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안에 편성할 예정이다. 유치원은 고교 무상화 대상에 소득 제한을 두어 확보한 금액으로 충당한다. 보육원의 경우, 당초 아동 수당 등의 재원으로써 기업이 부담하는 '사업주 갹출금'의 활용을 모색했지만 재계의 협력을 얻지 못해 예산 재편성을 통해 재원을 확보했다.

'1억 총활약 사회의 실현'을 내거는 아베 신조 총리는 육아 세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내걸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모든 3~5 세 아동의 보육료를 무상 지급하면 연간 7 천억 엔 이상의 재원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단계적으로 무상 교육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사히 신문 2015년 12월 16일자
기사출처: http://digital.asahi.com/articles/ASHDH4GTGHDHULFA01D.html?rm=402

기타

1. 에히메현, 중학생 대상 부모교육 실시

생명의 존엄성과 육아의 소중함에 대해 배우는 '생명 수업'이 7월 2일, 에히메 현愛媛県) 니이하마 시(新居浜市)의 이즈미가와 중학교에서 열려, 3학년 학생 84명이 아기를 돌보며 어머니들과 교류했다.

이 수업은 에히메 현의 '아기와 미소로 마주하는 수업'을 위탁 받은 '공동육아코디네이트그룹 SHAKE'가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지역 사업으로, 중학생들에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의 의의를 알리기 위함이다.

이 날, 니이하마 시내의 모자(母子) 약 100명이 중학교를 방문했다. 학생들은 생후 4개월~ 1년 6개월 사이의 영유아를 직접 안아보며 돌봤다. 수업 후, 참가 학생 중 약 80%는 '나중에 꼭 아이를 키워보고 싶다'고 답했다고 한다.

요미우리 신문 2015년 7월 3일자
기사출처: http://www.yomiuri.co.jp/teen/news/20150703-OYT8T50144.html

2. 아이치현, 나고야 아동상담소와 현(県) 경찰이 아동학대 대비 훈련

10월 16일 나고야시 미나토구(港区)에서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를 가정하고 나고야시 아동상담소와 현(県)경찰의 합동훈련이 실시되어 아동상담소 직원과 현경찰 약 60명이 연계 협력을 도모했다.

엄마가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해서 한 달 이상 행방불명이 된 경우, 자택에서 내연남의 고함이나 아이의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경우 등 6가지 사례를 가정하고 훈련을 실시했다. 아동상담소 직원이 방문하자 어머니와 내연남이 '시끄럽다, 돌아가라', '아이에게는 문제가 없다'는 등 저항을 하면 직원이 조사 취지와 보호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저항하는 부모를 제지하는 등의 긴박한 훈련이 실시되었다.

중앙아동상담소의 와타나베 사치코(渡辺佐智子) 소장은 '가까이에 친척이나 친구가 없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부모는 육아도 고립되기 쉬워 미숙함이 학대로 이어지기 쉽다. 경찰과 연계하면서 자연스레 부모들의 참여를 유도해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마이니치 신문 2015년 10월 17일자
기사출처: http://mainichi.jp/area/aichi/news/20151017ddlk23040145000c.html

미국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및 정책

1. 국가 보고서: 어린이집 지출과 등록이 놀라운 수준으로 상승

지난 5월 뉴저지 럿거츠 대학의 NIEER에서 발간한 국가 "어린이집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14년 기준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콜롬비아 특별지구가 국공립 어린이집에 1억 1,600만 달러를 더 사용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최대 55억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약 1% 증가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며 2013-2014년 주 정부 지원 어린이집이 130만 명의 아동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이며 이 중 110만 명은 만 4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8,535명의 아동들이 추가로 어린이집에 등록하였으며, 증가 및 감소 수치는 주마다 상이하다.

보고서에서는 어린이집 지출을 늘리고 아동 등록수를 확대한 주를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현재의 상승률이 오늘날 아동들에게 눈에 띄는 효과를 주기에는 다소 느리다고 경고했다.

만 4세 교육·보육 프로그램이 하위 200% 빈곤층의 모든 아동들을 포용하려면, 주에서는 더 빠른 속도로 어린이집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한다. 2013-2014년도 증가율에 따르면 만 4세 어린이의 50%를 포용하기 위해서는 75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70%를 포용하기 위해서는 150년이 걸릴 전망이다.

2014년에 몇개 주에서는 눈에 띄는 정책 변경이 있었다. NIEER 보고서에 제시된 주목할 만한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 전반적으로 만 4세 아동의 29%와 만 3세 아동의 4%가 주정부 지원 어린이집에 등록하였다.
-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 포함하면, 41.5%의 만 4세와 14.5%의 만 3세가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 로드아일랜드 주의 등록률은 63%까지 증가한 반면 알래스카는 16%로 감소하였다.
- 2014년 1월, 미시시피가 새로운 주정부 지원 어린이집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으며 1,774명의 어린이들을 등록시키기 위해 총 300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 워싱턴 DC의 만 3세 등록비율은 다른 주에 비하여 월등히 앞서며 만 3세의 69%가 공립 어린이집에 등록하였다.

- 5개의 주(알라바마, 알래스카, 노스캐롤라이나, 로드아일랜드, 루이지애나)만 10개의 기관 평가 인증 기준을 충족하였다.

- 10개 주는 9개의 평가기준을 충족시켰다. 5개의 주(캘리포니아, 오하이오, 버몬트, 플로리다, 텍사스)에서는 기관평가 인증 기준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 사우스 캐롤라이나주는 아동 1인당 2천달러 미만을 투자하고, 콜롬비아 특별구의 아리조나 주에서는 1만5천달러를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고서 원문: Barnett, W.S., Carolan, M.E., Squires, J.H., Clarke Brown, K., & Horowitz, M. (2015). The state of preschool 2014: State preschool yearbook. New Brunswick, NJ: National Institute for Early Education Research.

미국 교육 전문 주간지 Education Week 2015년 5월 11일자
기사출처:http://blogs.edweek.org/edweek/early_years/2015/05/national_report_preschool_spending_enrollment_up_incrementally.html

2. 시카고 어린이집, 부모참여가 중요

부모가 교육현장에 참여한다면 더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은 가족과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한 아동발달연구와 연계되어 있는 시카고 남부에 위치한 한 보육센터의 철학이다.

「에듀케어 센터」는 저명한 「로버트 테일러 홈(Robert Taylor Homes) 시카고 공공주거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에서 발전된 기관이다.

에듀케어는 부모로 하여금 아이들의 학습에 높은 참여율을 요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사회복지사와 다른 서비스와 연계된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지원한다. “부모들은 그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에듀케어 학습네트워크의 이사는 말한다. 센터는 가족들을 위한 도서관과 컴퓨터 은행도 보유하고 있다.

부모들은 시카고 공립학교 지원 시 좋은 유치원과 그 이후의 교육과정을 선별하기 위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케넬은 에듀케어와 꾸준히 연락을 하고 지내는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가 학교를 다니는 동안 잘 도와주고 있다는 높은 효능감을 보인다고 말했다.

에듀케어는 149명의 영유아들이 유치원 전 단계에 이를 때까지 무료 식사와 간식을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시카고 공립학교 지역에 위치한 비영리단체 Ounce of Prevention Fund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일일 운영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주, 정부 그리고 자선 기부를 통해서 지원받는다. 이 센터는 미국의 12개 이상의 주에 연계 시설을 만들어냈다.

"이것은 단순히 똑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학습문화 및 지역사회와 연계된 보다 강력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Ounce of Prevention Fund의 대표자 다이애나 라우너는 말했다.

시카고 센터의 주요 운영 방식은 지속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각 아동이 동일한 교사와 3년 연속 머무르는 것은 애착관계/안정관계 형성을 유도한다. 각 교실에는 3명의 교사가 있다. 최근 아침활동 시간에 유아들은 플라스틱 칼로 당근을 자르고 세발자전거를 이용하여 실내 체육관에서 코스를 돌며, 영아들은 교사들의 돌봄 하에 시간을 보낸다. 만 2세반 교실에서는, 6명의 아이들이 흑인 인형을 가지고 놀거나 주방놀이를 하기도 한다.

많은 에듀케어 아동들은 노숙, 위탁양육, 한부모가정, 가난으로부터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데,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아동발달연구소 연구는 에듀케어에 다닌 아동들이 단어구사능력과 학습준비도가 국가평균수준에 이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교육관련 기자 협회 The Education Writers Association 2015년 6월 18일자
기사출처:http://www.ewa.org/blog-educated-reporter/chicago-preschool-parental-involvement-key

3. 메사추세츠의 5개 도시, 종일제 어린이집 지원금 수령 가능

새롭게 시행되는 연방정부 지원 유아교육 프로그램이 메사추세츠에 있는 다섯 개의 도시에 종일제 어린이집 학급을 열도록 돕는다.

이 기금은 공립 학교와 지역 기반 어린이집 프로그램의 통합 역할을 담당하는 메사추세츠 어린이집 확장 프로그램(Massachusetts Preschool Expansion Grant Program)을 지원한다. 유아교육 및 보육부서의 통지문에 따르면, 다섯 개의 도시는 이번 해 45개의 학급을 편성할 수 있는 총1,400만 달러를 지원 받는다.

"새 학기를 맞이하여 학생들을 환영하는 동시에 이번 시도를 통해 다양한 유아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기쁩니다." 메사추세츠 주지사 찰리 베이커는 말했다. "우리의 목표는 더 많은 어린이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의 기회를 가지는 것과, 그들이 3학년이 될 때 까지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연방정부 기금은 홀리오크 도시의 78명 어린이에게 1년동안 종일제 어린이집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새로운 45개의 학급은 1년동안 종일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사 1인당 영유아 10명 정도로 작은 학급을 유지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에 따르면 연방 정부가 지정한 빈곤선 두 배 이하 소득 가정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다.

The Boston Globe 2015년 10월 1일자
기사출처:http://www.bostonglobe.com/metro/2015/09/15/federal-grant-allow-all-day-preschool-five-mass-cities/2SAysLNJ6BFOsAm0eaJD5L/story.html

4. 2015년 미국 유아기 5가지 주요 쟁점

2015년 미국 어린이들의 필요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다. 국가정책논의에서 초기학습은 유초중고등 및 대학교육에 아직도 밀리고 있지만, 주정부 정치인들은 가두연설에서 유아기 투자의 필요를 언급한다. 자선 투자자들은 초기학습에 자원을 겨냥하고 있으며, First Five Years Fund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아이들의 장기적 성공을 위한 초기학습의 중요성에 대해 더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는 2015년에 중요하게 다루어 졌고 계속적으로 논의될 5가지 주요 쟁점이다.

- 뉴욕시의 종일제, 공립 유아교육 프로그램 확장
- 테네시 주 Pre-K 연구 이후 어린이집 질 평가
- 헤드스타트 수행기준 점검
- 의학연구소 보고서에서 유아교육직무를 전문직으로 다룸
- 육아휴직 필요에 대해 늘어난 관심

위의 서로 다른 논의들이 2016년 그리고 그 이후 미래 유아교육에 어떤 의미일까? 첫째로, 헤드스타트 수행기준 점검, 테네시 주 연구와 의학 연구소 보고서는 모두 교육의 질에 대한 정교한 개념을 먼저 세울 필요가 있다는데 주목하고 있다. 교육의 질을 어떻게 보장하며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더 나은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두번째로, 뉴욕시의 공립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육아휴직 확장은 지방자치정부가 앞으로 유아교육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육이 Pre-K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출생 후부터 저학년까지의 아동발달과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지원하는 것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논의도 있다.

이러한 이슈들이 2016년에 어떻게 펼쳐져 나갈지 관심있게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US News 2015년 12월 17일자
기사출처:http://www.usnews.com/opinion/knowledge-bank/2015/12/10/the-top-5-early-childhood-stories-from-2015

교육·보육 비용

1. 증가하는 보육료, 경제의 일부인 보육시설

경제개발 위원회(Committee for Economic Development)는 보육시설이 부모로 하여금, 특별히 어머니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가정들은 보육료를 감당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11년까지 보육료는 2배 가까이 늘었지만 보육료 지원금을 받는 가정은 2005년 7.3%에서 2011년 6.4%로 줄었다.

위원회의 보고서 “Child Care in State Economies”에는 많은 숫자들이 인용되었는데 이것은 위원회가 고용한 경제연구회사가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여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이러한 보육시설에 대한 보고는 많은 사실과 수치들을 통해 보육산업의 크기를 보여주려는 시도를 했다. 보고서에서 발췌한 흥미로운 사실과 수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4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의 1/3(670만명)이 보육시설에 다닌다.
- 2011년 맞벌이 부모는 매 주 평균 143달러(연평균 7,436달러)를 보육료를 냈다. 보육료는 주, 시설, 자녀의 나이에 따라 상이하다.
- 보육시설에 등록한 어린이의 반 이상(56.1%)의 가정 소득은 매 달 평균 4,500달러이다.
- 15세 미만의 아동 중 22.8%가 저소득층에 해당하였으며, 그 중 17.6%가 보육시설을 이용한다.
-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실직상태이거나 시간제 근무를 하는 아버지가 자녀의 보육을 담당하는 비율이 2009년부터 크게 늘고 있다.
- 2013년에 연방 및 주정부 보조금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가정에게 약 120억 달러를 지원했다.
- 연방 및 주정부의 총 보조금 지원비(약 160억 달러)는 미국 전체 보육산업 수익의 1/3을 넘는다(37.8%).

- 보육산업은 약 150만명을 고용하며 미국 전역 다른 산업 분야에 624,480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한다.

미국 교육 전문 주간지 Education Week 2015년 9월 4일자
기사출처:http://blogs.edweek.org/edweek/early_years/2015/09/child_care_increasingly_expensive_popular_part_of_economy.html

2. 중산층 가정 대상 "보육료 지원" 거의 없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제리 브라운은 대학등록금 동결을 위해 논쟁을 벌였지만 이보다 보육비용의 증가가 중산층 가정에게 더 큰 걱정거리이다. 그러나 보육비용에 관련 내용은 국가의 공공정책 의제에서 눈에 띄게 논의되지 않고 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많은 중산층 부모들은 영유아 자녀 보육·교육을 위해 아동 1인당 매년 2만 4천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해 학비는 학생당 1만 3천 달러이다.

작년에 캘리포니아주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보육지원금을 지원하고 유치원 할당 인원을 늘렸다. 많은 연구들이 질 높은 보육이 학업성취도를 비롯하여 다른 장기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산층 가정은 지원을 거의 받지 못했다.

작년 미국 진보센터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육아 및 건강관리 등 기본적인 필요에 대한 비용이 지난 몇 십년 동안 크게 증가했으며 이러한 비용이 가정 예산의 점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산층의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고 하였다.

중산층 가정은 저비용 주거환경을 선택하고 낮은 품질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등 다른 예산을 절감하며 생활하고 있으며 이는 부모들에게 큰 스트레스가 된다고 볼 수 있다.

2014년 캘리포니아에서는 가정 소득에 상관없이 유치원 준비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유아의 연령을 만 4세까지 확대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주지사 브라운과 의회는 이 대신 저소득층 유아를 위한 국가 지원 종일제 유치원을 11,500개 확충했다.

前 주 상원의장 스테인버그는 "주 어린이집은 반드시 저소득층 가정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보다 많은 가정에게 지원해주고 싶지만 재정적 지원 없이 이는 불가능하다." 고 말했다.

최근 몇 주간 캘리포니아에서는 보육·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를 지지하는 단체들은 캘리포니아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만 4세

를 위한 종일제 프로그램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들의 자녀들을 위한 보육시설이 필요한 중산층 가정의 경우 난감한 입장이다.

비영리 교육 관련 저널 EdSource 2015년 3월 4일자
기사출처:http://edsource.org/2015/middle-class-families-get-little-help-in-paying-for-early-care/75477#.VRgqnJPF8kU

2. 여성-영유아 영양 보조 프로그램(WIC Program)의 변화: 더 많은 선택권과 편리함

WIC(Women, Infants, and Children Program)는 여성과 영유아의 영양을 보조하는 특별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40년 동안 임산부와 산모, 그리고 어린이들이 음식을 잘 섭취하고, 영양교육을 받으며 건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었다. WIC는 영양교육, 모유수유 지원, 영양가 있는 음식 등을 제공하면서 가족들이 더욱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가족들에게 다른 지역공동체와 연계를 제공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도와주었다. WIC는 임산부와, 모유수유를 하는 여성, 그리고 5살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을 지원한다.

현재 브래틀브로 지역의 750명 이상이 WIC의 지원을 받고있다. 베몬트 지역의 가족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WIC는 기존의 배달 시스템을 eWIC 카드를 이용하는 전자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WIC 음식은 집으로 직접 배달되고 있으며, 과일 및 채소는 WIC에서 발급해준 “과일채소카드”를 가지고 정해진 상점에 가서 구매할 수 있다.

향후, 베몬트 지역의 가족들은 eWIC카드를 사용하여 모든 WIC 음식을 상점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다. 가족들은 요거트, 통밀파스타, 또띠아 등 새로운 WIC 음식 선택권을 가진다. 이것은 계란, 유제품, 시리얼, 통밀, 땅콩잼 등 기존 WIC 음식에서 더 확장된 것이다.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WIC의 지원을 받는 가족들은 더 많은 선택권과 편리함을 누릴 것이다. 배달을 받기 위해 더운 날 바깥에 냉장 박스를 놓지 않아도 되며, 배달 확인증은 더이상 필요없게 된다. 가족들은 한 달에 두 번 많은 양의 음식을 한꺼번에 받을 필요없이 음식이 필요할 때마다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된다. eWIC카드를 사용하여 음식을 구매할 때마다 상점은 해당하는 달에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음식 목록이 적힌 영수증을 주어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 수 있게 한다.

WIC의 지원을 받는 미국 모든 주의 가족들에게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새로운 카드가 발급될 예정이다. 브래틀브로 보건부는 11월에 새로운 카드를 우편으로 발송할 것이며, 가족들은 12월 1일부터 그 카드를 사용하여 WIC 음식을 구매할 수 있다.

미국 양육 관련 주간지 Parent Express 2015년 10월 21일자
기사출처:http://www.sentinelsource.com/parent_express/family_wellness/more-choices-greater-convenience-wic-program-changing-in-windham-county/article_dd1215f4-7801-11e5-9a69-ff5283de8a7d.html

일·가족 양립 정책

1. 워싱턴 보건복지부의 “신생아 동반 출근” 정책 시행

워싱턴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정책 시행으로 최근 회사들이 부모가 그들의 신생아를 직장에 데려오는 것을 허용하는 경향이 늘고있다.

‘신생아 동반 출근’ 정책은 어머니들의 육아휴직이 끝난 후 그들의 자녀가 6주에서 6개월 이하이면 직장에 데려올 수 있도록 허용한다.

매리사와 그녀의 아들 가빈은 ‘신생아 동반 출근 정책’의 시범운영 대상자였다. 그녀는 아들이 8주 때부터 직장으로 동반 출근하였고 이것이 그들에게 여러모로 이득이라고 말했다.

“가빈은 아주 행복한 아기입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때문입니다. 하루종일 제 주변에 있는 것이 베이비 시터와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워싱턴 보건복지부의 정책은 사생활 공간과 모유수유를 위한 독립적인 방들을 따로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가이드 라인은 아래와 같다.

- 어머니는 상근 직원이어야 한다.
- 어머니의 직업환경이 자녀에게 위험하다면 직장에 데려올 수 없다.
- 부모는 그들의 동료들에게 자녀를 데려올 계획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야 한다.
-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자녀를 돌봐줄 예비 보호자가 직장에 있어야 한다.

매리사의 직장동료들은 아이가 주위를 산만하게 만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새로운 ‘신생아 동반 출근’ 정책이 그녀가 직장에 돌아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한다.

“저는 어머니의 역할을 소화하는 동시에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 왔을 때 제 인생의 일부를 집에 떼어놓고 왔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다.”

워싱턴 보건복지부 주변의 다른 회사들도 비슷한 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미국 지역 뉴스 KOIN 2015년 8월 4일자
기사출처:http://koin.com/2015/08/04/wa-health-dept-tries-infants-at-work-policy/

2. 왜 미 해군의 유급 출산휴가가 중요한가

7월 2일, 해군장관 레이 마버스는 미해군이나 해병대에 소속되어있는 여군들이 지금부터 18주의 유급 출산휴가를 가질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이전에 여군들이 받았던 혜택의 3배에 달하는 것이다. 이로서 미해군과 해병대는 미국에서 6주 이상의 출산휴가를 제공하는 첫번째 시행처가 되었다.

총 18주의 유급 출산휴가는 6주의 유급 출산휴가와 12주의 유급 요양휴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이 휴가는 여군의 출산 후 온전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 휴가는 꼭 연결하여 쓸 필요는 없지만 자녀의 출생 후 1년 안에 사용해야 한다. 정책 변경은 즉시 시행되며, 미해군이나 해병대에 속해있고 2015년 1월 1일부터 출산한 모든 여군들에게 적용가능하다.

미국 다른 군대의 현 규제에 따르면, 출산휴가는 한번만 사용가능가며 6주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결혼한 남자의 출산휴가는 10일로 한정되어 있으며 연속해서 사용해야 한다.

비슷한 법안이 일리노이 하원 의원 태미 덕워드에 의해서 소개되었다. Military Opportunities for Mothers (MOMS) 법안은 2014년 국방위원회 수권법을 일부 통과하였으나 상원투표를 통과하지 못하였고, 결국 의회에서 통과하지 못하여 파기되었다.

현재 미국 연방 소속 노동자들은 유급 출산 휴가를 지급받지 않는다. 국회의원들은 매 의회때 마다 이 법안을 변경할 방법을 찾아왔다. 2015년 1월, 뉴욕의 하원 의원 캐롤린 멜로니는 연방 공무원들을 위한 6주 유급 출산 휴가법을 소개하였다. 이 법안은 감독 위원회와 정부개혁부서에 전달되었으며, 최종 통과 여부는 위원회 전체 투표를 통해 결정될 것이다.

현재 미국은 전 세계에서 유급 출산휴가를 제공하지 않는 두 나라 중 하나로서, 다른 한 나라는 파푸아뉴기니이다.

미국 뉴스 방송사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2015년 7월 6일자
기사출처:http://www.csmonitor.com/USA/USA-Update/2015/0706/Why-US-Navy-paid-maternity-leave-is-a-big-deal

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

1. 듀크대, Pre- K 프로그램의 장기적 효과 입증

최근 듀크대학교에서 발표한 한 연구는 주정부의 지원을 받는 만 4세 보육·교육 프로그램(이하 4K)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이후 특수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할 확률이 줄어든다고 발표했다.

이 연구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위치한 도시 모어(More)의 만 4세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13년의 기간 동안 축적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되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시기에 조사한 결과, 4K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참여하지 않았던 학생들보다 특수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확률이 32% 낮았다.

건강 지원 프로그램인 스마트 스타트 프로그램에 등록했던 어린이들의 비율은 10% 정도 낮았다. 두 프로그램에 동시에 등록했던 어린이들은 39%의 감소율을 보였다.

연구저자는 해당 지역에서 만 4세 어린이 한명 당 1,100달러의 비용을 투자하고 있지만 특수 교육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들은 평균적으로 두 배의 비용이 든다고 설명하였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의 총 액수는 매년 16,000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또한 이러한 비용은 매년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만 4세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해당 연구결과는 어린이집 시설확장을 위해 노력하는 최근 미국의 추세에 활력을 더할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미국 최고 주립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40개 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보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교육정책 연구원 앤드류 맥이아친은 현재 주정부의 보육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 증가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연구의 결과가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앤드류 맥이아친: “각 주의 정책결정자들은 그들이 만 0-5세 어린이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지원하고 있지 않다면 그 어린이들이 3학년이 될 때 더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는 미국 전체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4K 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맥이아친은 해당 연구가 보육프로그램의 질적인 측면도 다루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어린이집에 투자한다면 추후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들이 적었음을 밝혀냈다.

연구의 주저자인 클라라 머스킨은 이번 연구결과가 보육프로그램의 긍정적인 효과가 어린 시절에 사라진다는 다른 연구결과를 반증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초등학교 3학년 시절에 보여지는 긍정적인 결과를 통해 보육프로그램의 장기적 효과를 증명한다고 덧붙였다.

클라라 머스킨: “4K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 그들이 가진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빠른 교육 개입이 이루어지면 어린이의 특수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비용 절감의 효과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미국 공영 라디오 NPR 2015년 2월 4일자
기사출처:http://www.npr.org/blogs/ed/2015/02/04/383571989/pre-k-pays-off-by-lowering-special-ed-placements

2. 유치원(만5세)과 유치원 준비과정(만4세) 혼합반 제도가 직면한 어려움

새롭게 제정된 법령에 따라 캘리포니아 소재 학교들은 만 4세 유아들을 위한 유치원 준비과정을 도입하였다. 현재 수 천명에 해당하는 만 4세 유아들이 만 5세와 함께 혼합연령반에 속해있으며, 교사들은 해당 법령에 따라 만 5세 유아들의 진학 준비에 기여하는 동시에 만 4세 유아들을 함께 수용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캘리포니아 교육부가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14년도에 약 57,000명의 유아가 유치원 준비과정에 속해있었으며 총 78%의 교실이 만 4,5세 혼합연령을 대상으로 운영되었다. 또한 1,298개의 교실이 유치원 준비과정에 제공되었으며 4,674개의 교실은 혼합연령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는 매년 12월 2일이 되기 이전에 만 5세가 되는 모든 유아들에게 유치원 입학을 허락하였다. 하지만 2012-13년부터 유치원 입학 가능 연령을 상향조정하고 어린 유아들에게 유치원 준비과정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유치원 준비과정의 입학대상이 되기 위해서 어린이들은 9월 2일에서 12월 2일 사이에 반드시 만 5세가 되어야 한다. 많은 학교에 유치원 준비과정을 위한 독립적인 교실 혹은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과 유아교육 전문가들은 일부 혼합연령반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유치원 준비법 2010』의 저자인 전 상원 의원 조 스미티안은 “해당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지역들이 그들의 상황에 적합한 유치원 준비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권을 주

고자 하였다" 라고 말했다. 스미티안이 언급한 선택권은 유치원 준비과정 단독 교실과 혼합 연령반을 모두 포함한다.

스미티안은 예상보다 많은 혼합연령반의 수에 대해 당황스러웠지만 이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다. "올 해가 유치원 준비과정을 시행한 첫 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리가 잡힐 것입니다. 저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혼합연령반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만 5세 이하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적 후원단체인 First 5 California의 부회장 에린 가벨은 혼합연령반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혼합연령반이 학습이 아닌 놀이 중심이기 때문에 유아들에게 발달적으로 더 적합한 교육과정이라고 믿는다.

"사람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과정은 완전히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영유아들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사실이다."

프레스노(Fresno)주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라 바론은 경력이 많은 일부 유치원 교사들은 가벨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바론의 박사논문은 프레스노(Fresno)와 커런(Kern) 지역에 있는 24개의 자치단체에서 유치원 준비과정을 적용한 사례에 대한 것이며 해당 논문에서 교사들은 혼합연령교실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언급했다. 이유는 혼합연령교실에서 손인형 극장 등을 이용하여 언어능력 및 사회성을 기르는 등 놀이에 중심을 둔 교수방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치원 준비과정 시행 첫 해에 교사들은 두 개의 교육과정을 혼합하여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특히 한 학급의 유아가 20명이 넘을 때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교사들은 연초에 특히 어려움을 겪었으며 새로운 교수전략을 다양하게 시도함으로써 어려움이 다소 개선되었다고 말했다. 바론은 어린 유아들은 가만히 서있기, 차례를 기다리기, 나눠 쓰기, 규칙 지키기 등 사회정서적 기술을 배우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하였다. 반면 이러한 교육에 집중하였을 경우, 만 5세 유아들은 지루함을 느끼고 학업적인 성취가 떨어진다고 교사들은 말했으며 언어, 미술, 수학적 능력이 뛰어난 만 5세 유아들 중 몇몇은 종종 학교에 결석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한 교실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연령그룹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서니베일 지역은 유치원 준비과정 시행에 대한 접근을 바꾸었다. 내년부터 해당지역은 혼합연령교실을 제공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유아가 특별히 뛰어난 학습능력을 보이지 않는 한 유치원 준비과정을 마친 이후 유치원에 입학하게 된다.

*Transitional Kindergarten(유치원 준비과정): 기존의 유치원교육과정을 유아의 연령과 발달상태에 맞게 2년으로 구성한 것 중 1년차 만 4세에 해당하는 무료 교육과정을 지칭한다. 유아가 아직 만 4세이지만, 9월 2일부터 12월 2일 사이에 생일을 지나고 만 5세가 되었다면 자격이 된다. 한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비영리 교육 관련 저널 EdSource 2015년 3월 25일자
기사출처:http://edsource.org/2015/classes-combining-kindergarten-transitional-kindergarten-pose-challenges/76826#.VRgqAZPF8kU

3. 대근육활동이 부족한 아이들

일부 연구에서 아동은 하루 최소 2시간의 대근육활동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애틀의 연구에서 아동의 대근육활동 시간이 하루 평균 48분에 불과한 사실을 발견했다.

워싱턴 대학의 조교수이자 시애틀 어린이 병원의 연구원인 푸자 탄돈은 대근육활동은 아동 비만을 예방하고 근육 및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동 비만은 지난 세대에 걸쳐 놀랍도록 증가하였다. 비만관리본부에 따르면 만 6세 ~ 11세 아동들 중 비만 아동의 비율은 1980년 7%에서 2012년 약 18%로 증가하였고, 만 12세~ 19세 청소년 비만율은 5%에서 약 21%까지 증가하였다.

탄돈은 최근 학업 성취에 대한 요구가 어린이집에도 반영되어 동적인 활동과 놀이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말하면서, 높은 연령의 아동들의 대근육활동과 학습이 강한 연관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연구결과, 아동들은 하루 중 12%의 시간동안만 동적인 활동 및 놀이를 하고 있었으며, 29%는 낮잠시간이었다. 나머지는 간식 및 식사시간, 혹은 정적인 활동을 하면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바깥놀이 시간은 30분을 조금 넘기는 수준이었다. 연구의 책임자인 탄돈은 대근육활동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델라웨어 아동의료 담당기관의 부원장 데비 청은 어린이집에서 동적인 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버스의 바퀴” 이야기를 조용히 앉아서 읽고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바퀴를 굴리고, 와이퍼를 움직이는 행동을 따라하는 활동 등은 아이들에게 대근육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청은 바깥놀이 공간이 없으나 근처 이웃의 주차장을 빌려 아이들이 오전 중 한 시간을 놀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낸 피츠버그의 한 어린이집을 예를 들며 강조하였다.

청은 아동들의 행동이 개선되면 낮잠시간에도 좋은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부모들은 바깥놀이시간의 장점을 보고 아이들로 하여금 바깥 놀이 기회를 점점 더 많이 마련하고 있다.

어린이집 기관 담당자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동적인 활동을 장려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에 국제적으로 어린이집과 단기 돌봄 센터 지점을 운영하는 브라이트 호리즌의 부원장인 레이첼 로버트슨은 동의했다.

“우리가 언어 및 수리 발달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교육자인 우리들은 동적인 놀이시간을 갖는 것을 장려하는 것을 넘어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를 현실화 시키도록 변화하여야 한다.”고 로버트슨은 말했다.

“아이들이 그들의 몸을 이용해서 글자를 표현하는 것, 혹은 줄넘기를 하며 숫자를 연습하는 것 모두 대근육 활동인 동시에 학습이다. 우리는 대근육 활동을 독립적인 활동으로 보기보다 우리 삶에 녹아든 자연스러운 신체활동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라고 로버트슨은 주장했다.

USA TODAY 2015년 5월 18일자
기사출처:http://www.usatoday.com/story/news/2015/05/18/preschoolers-not-exercising/27396311/

4. 교육매체를 이용한 수학 학습 지원(PEG+CAT)

(PEG+CAT은 미국-캐나다의 TV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으로 2012년에 출판된 “The Chicken Problem”이라는 어린이 동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주정부 Ready to Learn Initiative에 있는 프로그램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자녀와 함께 교육적인 매체를 시청하고 놀이하는 것은 저소득층 부모의 효능감을 높이고 자녀의 학습을 지원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을 돕는다.

교육발달센터(Education Development Center)와 SRI Education의 연구원들은 200명의 저소득층 미취학 아동들을 임의로 지정하여 가족들이 집에서 기존의 행동을 계속해서 보이는지 혹은 ‘PEG+CAT’ 태블릿과 어플등의 활동자료들을 사용하는지를 12주 동안 관찰하였다.

‘PEG+CAT’를 자녀와 함께 시청한 가족들은 더 많은 협동놀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들은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에 나왔던 문제해결 방법을 집에서도 사용한다고 했다.

부모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자신감을 가지고 자녀의 수학학습을 도와준다고 하였으며, 자녀들의 서수, 공간지각, 입체지각 능력은 'PEG+CAT'를 시청하지 않은 그룹의 아이들보다 더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교육 전문 주간지 Education Week 2015년 12월 9일자
기사출처: http://www.edweek.org/ew/articles/2015/12/09/parent-involvement.html

교사

1. 유치원 교사 양성: 인원은 많으나 재정이 부족

많은 사람들이 유치원 교육은 투자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높은 질의 유아교육 프로그램에 1달러를 투자하는 것이 후에 큰 효과를 낸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에서 "질 높은 유아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투자라고 본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유아교육의 쟁점은 단순한 기회 제공이 아니라, 어떻게 질 높은 교육을 전달하느냐에 있다.

무엇이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인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하다. M. Caridad Araujo는 최근 브루킹스 포스트에서 교사들이 "(다른 분야의 직업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매력적이고 높은 보수를 받는 것, 그래서 그들의 전문성이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 이 높은 유아교육의 질과 관계가 있는 요소라고 보았다.

불행하게도, 미국 다양한 주의 데이터들은 유치원 교사들이 충분한 급여를 제공받지 않고 있으며 경력교사들이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에 제시된 데이터는 College Measures가 정부와 함께 협동하여 고등교육을 받은 졸업생의 소득을 추적한 내용이다. 이 데이터는 실업보험급여 자료와 학생들의 전공, 학교, 졸업년도를 나타내는 성적증명 자료를 합친 것에서 온 것이다.

이 자료는 국가 정책 필요와 다양한 주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필자가 이 글에서 보고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유아교육에 종사하도록 훈련받은 학생들은 다른 분야와 비교하면 적게, 심지어 아주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이 패턴은 분명하게 보여진다.

첫번째 예시로, 플로리다주는 전문대학에서 유아교사들을 양성하는 “자격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다른 자격증을 살펴보면 단순 사무직에서 보건종사직, 용접업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표 1>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유아교육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은 다른 자격증을 가진 학생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격증 취득 후 5년 뒤의 임금을 비교했을 때, 이들은 미국 고졸 평균 임금인 $26,000보다도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건에서 사회복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임금의 두 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콜로라도주의 데이타를 살펴보면 플로리다주의 이러한 현상이 예외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콜로라도주는 다른 주의 전문대학의 인간발달 전공과 비교했을 때 꽤 많은 학생을 보유하고 있다. 이 전공의 공식 명칭은 “인간발달, 가족학, 그리고 관련서비스”이다. 이러한 전문대학에서 제공되어지는 주요 자격증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바로 유아교육이다. 콜로라도는 유아교육분야에서 적어도 세 개의 다른 자격증을 제공한다. 콜로라도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자격증 취득 후 십년 뒤의 평균 소득을 알 수 있다. 기준은 고졸 평균임금으로 대략 $30,500이다.

세 개의 인간발달 자격증 중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상대적인 저임금은 뚜렷히 드러나고 있다. 10년 뒤, 일 년 이하의 코스로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은 같은 조건의 다른 동료들이 버는 것에 비해 40% 정도 밖에 벌지 못한다. 그리고 인간발달전공 전문대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같은 조건의 다른 학생들보다 반 밖에 벌지 못한다.

[표1] 플로리다 주: 유아교육 전공자의 임금

	유아교육 전공자		모든 수료자	
플로리다	1년차	5년차	1년차	5년차
평균 임금	$20,600	$26,500	$34,108	$40,600
사회보장연금지원률	21%	17%	10%	10%

[표2] 콜로라도 주: 보육관련 전공자의 임금

	인간발달, 가족학, 관련서비스 전공자		모든 수료자	
평균 임금	1년차	10년차	1년차	10년차
1년 미만 자격증 프로그램	$21,200	$21,900	$24,500	$53,900
1년 이상 2년 미만 자격증 프로그램	$23,100	$33,800	$31,500	$48,900
전문대 학위	$21,400	$27,900	$41,600	$54,100

[표3] 텍사스 주: 보육관련 전공자의 임금

	인간발달, 가족학, 관련서비스 전공자			모든 수료자		
평균 임금	1년차	10년차	학위취득기간	1년차	10년차	학위취득기간
자격증	$17,7800	$23,500	3.9	$27,000	$53,900	3.2
전문대 학위	$20,600	$27,000	5.1	$32,300	$46,600	4.7

교육 관련 네트워크 Real Clear Education 2015년 4월 23일자
기사출처:http://www.realcleareducation.com/articles/2015/04/23/early_childhood_education_no_money_lots_of_mouth_1193.html

기타

1. 더 나은 교육을 위한 영유아 건강에 초점 맞추기

코네티컷의 전문가들은 어린 아이들이 향후 학교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노력으로 더 많은 예산과 관심을 그들의 건강에 투자하고 있다.

이 노력들에는 어린이집에서의 발달 측정, 가정방문, 부모들을 위한 상담전화, 소아과 의사들과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정서적, 행동적인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는 교사들을 위한 지원 등이 있다.

이러한 노력은 영유아의 기초 건강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그 아이가 학교에서 학습 및 사회적 기대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영유아 건강 정책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이해와 더불어 그들의 발달에는 큰 관심이 있어왔습니다.” 코네티컷 영유아 건강 및 발달 연구소의 부원장인 리사 호닝펠드가 말했다.

지난 10년 동안,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여 추후 개선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에 연방정부의 많은 예산 지원이 있었다.

2014년 코네티컷 입법부는 출생부터 만 8세 아동을 담당하는 부처인 Office of Early Childhood를 승인했다.

United Way는 영유아 발달에 관한 무료 정보를 부모에게 지원했으며, 여러 사기업이 영유아 건강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몇몇 영유아 정책들은 교육적 목표와 관련된 염려에서부터 시작되었으나, 이후 많은 정책들이 영양, 치아 관리, 정신 건강 문제와 같은 건강 요건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다.

"건강에 대한 염려는 주로 혈압이나 미열에 관한 것이었지만 오늘날 건강에 대한 개념은 아주 넓어졌습니다." 여러 영유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The Village for Families and Children의 부원장 헥터 글린이 말했다.

비만도, 천식률, 출생 몸무게 등 어린이들의 건강을 측정한 결과를 보면 코네티컷에 아직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건 데이터에 따르면 2010-11년 코네티컷 유치원 어린이와 3학년의 거의 3분의 1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이었다. 2012 천식 보고서에 따르면 코네티컷은 국가 평균(9.4%)보다 높은 유아 천식률(11.3%)를 보였다.

의사들은 어린이들 사이에 정신 건강 문제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보고했다. 어린이들의 낮은 학업 성적은 종종 건강이나 정신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7월에 발표된 20년간 진행된 종단연구에서는 유치원에서의 긍정적 사회발달이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졸업 및 취업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학습준비가 되지 않은 어린이들이 주로 건강 문제나 사회정서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호닝펠드가 말했다.

가정방문은 많은 영유아 정책에서 보편화되고 있다. Child First는 상담사를 집으로 보내어 가족들에게 트라우마 치료를 한다. The Federal Maternal, Infant and Early Childhood Home Visits 프로그램은 가족들의 육아문제를 돕는다.

코네티컷 주는 최근 영유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이는 건강 및 학습 데이터를 추적하여 정책 결정자와 전문가들이 어떤 사안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를 돕기 위함이다.

* 코네티컷 영유아정보시스템은 Office of Early Childhood와 협력하여 영유아의 건강 정보 취합을 목적으로 지역사회에 예산 및 기술을 지원한다. 취합된 정보는 코네티컷 주가 영유아 보건 및 학습 준비도에 관련한 정책을 만들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보육관련 전문가들이 더 나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돕는다. 영유아정보시스템은 현재 52개의 지역사회를 지원하며 출생부터 만 8세 아동들의 초기 학습을 관리한다. 필요에 따라서 보건 전문의를 연결하여 아동들의 건강상태와 필요를 측정한다. 또한 교육/보육시설의 환경을 개선을 하고, 정신건강상담 및 부모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출처: 코네티컷 영유아 건강 및 발달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chdi.org/)

미국 지역 뉴스 New Haven Register 2015년 7월 31일자
기사출처:http://www.nhregister.com/general-news/20150824/early-childhood-health-targeted-as-path-to-better-education

캐나다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및 정책

1. 44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앨버타주 신민당 정부, 보육 및 교육 예산 증액

2015년 10월 연방총선거를 앞둔 가운데 5월 5일 치뤄진 앨버타(Alberta)주 선거에서 1971년 이래 44년동안 집권해왔던 진보보수당(Progressive Conservative)이 선거에서 패배하고, 보육정책 등에 있어 공공지원 강화를 공약으로 앞세운 신민당(NDP)이 정권교체를 이뤄냈다.[1] 그 가운데 신민당은 2015년 후반기 예산에서부터 보육 등에 대한 지원예산을 크게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선거에서 NDP는 공공복지의 증대를 공약으로 내세워 집권에 성공할 수 있었다. 특히 NDP는 보육과 교육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을 전부터 주장해 왔는데, 앨버타주 NDP정부는 최근 신학년도 이후의 학교 시스템 관련 예산을 1억3백만 달러 이상으로 증대하고, 부모의 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낮추는 퀘벡식 보육모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교육 관련 예산의 증액과 관련해서는 5월 말 현재 1억3백만 달러의 추가지원이 확정되었으며, 이 외에도 더 많은 추가예산이 편성,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총리 대변인인 찰리 오티스(Cheryl Oates)가 5월 30일 밝혔다. 이것은 과거 집권당인 진보보수당 정부가 3월 교육위원회에 확약한 예산 외에 새로 집권한 NDP정부가 추가적으로 2억1300만 달러 지원을 약속했다는 '메트로지(Metro紙)'의 NDP 내부문건 보도 이후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실제로 NDP 대변인에 따르면, 1억3백만 달러의 예산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란 점에서, 2016년 8월말까지의 학년도 전체 운영을 위해서는 더 큰 규모의 교육예산 증액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앨버타주 NDP정부의 교육예산 증액이 시행되면 유치원학년(K-grade) 학생 등에 대한 공공지원 역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2]

한편, 레이첼 노틀리(Rachel Notley) 앨버타주 총리는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서 직접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부모의 시설이용금액을 낮추기 위해 비용을 보조하는 이른바 '퀘벡식 보육모델(Quebec-style child-care model)'인 "하루 25달러 보육료 계획($25-a-day child care plan)" 추진을 천명한 바 있다. 매달 보육료로 수천달러를 지불하는 부모들에게 NDP정부의 이러한 정책 움직임은 환영받고 있다. 그러나 결국 문제는 예산부담 및 세금증액에 대한 우려이다. 선거 당시 NDP가 추정한 바에만 따르더라도, 하루 보육료를 25달러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는 현재시점으로부터 2019-2020년 예산연도까지에만 최소 4억5천만 달

러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더불어, 정부로부터의 보육비용 보조금 증액이 될 것을 예상한 보육시설들이 보육료를 점차 더 올리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앨버타주가 추진하는 퀘벡식 보육모델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세 살 미만의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전직 간호사 크리스티 안데르센(Kristie Andersen)은 "두 아이를 종일보육시설에 보내는 비용만 한 달에 2,375 달러인데, 이것은 모기지 액수보다 많은 금액이다. 이런 형편에서 남편과 내가 가계를 운영해 나가는 것은 정말 어렵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보육비보조금(daycare credit) 20달러 뿐이다"라며, NDP정부의 새 정책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공익단체에서도 이러한 정책이 특히 저소득층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게 함으로써 그들이 비싼 보육료를 내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는 현상이 줄어드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이 비용은 '지출'이 아닌 일종의 '투자'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실제 정책 효용성에 대한 회의어린 목소리도 존재한다. 캐나다 납세자 연맹(Canadian Taxpayers Federation)의 앨버타 지부장인 페이지 맥퍼슨(Paige MacPherson)은 이 정책으로 인한 보육비 감소의 혜택이 과연 많은 부모들에게 효과적으로 돌아갈지 의문이라고 하였다. 보육료로 인해 부담을 겪는 저소득층은 이미 주정부와 연방정부로부터 다양한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오히려 이런 보육비 보조가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을 부추겨 수요과잉을 초래하고 보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3]

그러나, 전혀 다른 이유로 인해 NDP정부의 새 보육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는 경우도 있다. 밴쿠버 UBC 대학(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Human Early Learning Partnership의 Associate director인 폴 케셔(Paul Kershaw) 박사는 앨버타 새정부의 정책이 환영할만한 것이기는 하지만, 하루 25달러의 보육료라는 것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1년이면 6,000달러이다) 실제 기대했던 것 만큼의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NDP 정부의 정책이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65세 이상 앨버타 노인에게 들어가는 돈은 1인당 1만8천불인데 비해 45세 미만 앨버타인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1인당 7,800불에 불과하여 세대간 공적투자비용의 격차가 과거에 비해 더 벌어지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4]

퀘벡주에 이어 앨버타주에서도 교육예산 증액 및 정부 차원의 보육료 지원 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러한 육아지원정책의 동향과 움직임이 다른 주에, 그리고 올 10월 연방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주목된다.

---

[1] 관련 선거결과 보도뉴스 참조
(http://www.cbc.ca/news/elections/alberta-votes/alberta-election-2015-results-ndp-wave-sweeps-across-province-in-historic-win-1.3062605 등). PC당의 선거참패는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샌드오일(Sand-oil) 등에 의존하는 산유주(産油洲) 앨버타의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집권 PC

당 정부가 학교와 병원 등의 지원예산은 삭감하면서도 세금은 인상하게 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더해, 자유당과 신민당 등 진보진영에서는 지속적으로 보육료 지원과 같은 정부의 공공복지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왔고 이것이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2] "Alberta NDP confirms plans for additional education money in fall budget," (http://metronews.ca/news/calgary/1382823/alberta-ndp-confirms-plans-for-additional-education-money-in-fall-budget/)

[3] "Will a low-cost, Quebec-style child-care model work in Alberta?" (http://metronews.ca/news/calgary/1374156/will-a-low-cost-quebec-style-child-care-model-work-in-alberta/)

[4] "Alberta NDP's $25-a-day child care plan doesn't go far enough, researcher says" (http://metronews.ca/news/calgary/1377025/alberta-ndps-25-a-day-child-care-plan-doesnt-go-far-enough-researcher-says/)

* (교육예산 증액 관련)
http://metronews.ca/news/calgary/1382823/alberta-ndp-confirms-plans-for-additional-education-money-in-fall-budget/

* (앨버타주가 추진하는 '하루 25달러 보육료' 관련)
http://metronews.ca/news/calgary/1374156/will-a-low-cost-quebec-style-child-care-model-work-in-alberta/

* (앨버타주의 추진정책에 대해 불충분하다는 전문가 의견 관련)
http://metronews.ca/news/calgary/1377025/alberta-ndps-25-a-day-child-care-plan-doesnt-go-far-enough-researcher-says/

2. 노스웨스트 준주, 퀘벡주 방식의 보편적 보육 실시에 연간 2천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정책 타당성 조사 결과 기존 예산의 175% 증가 필요

노스웨스트 준주(Northwest Territories, 이하 N.W.T.)[1] 정부의 의뢰로 수행된 정책타당성 조사 결과, 부모의 보육시설 이용가능성을 높이는 보편적 보육 프로그램 실시를 위해서는 연간 2,100만 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주 정부는 토론토대학교 교수진에게 연구를 의뢰해 퀘벡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과 유사한 보육 정책을 노스웨스트 준주에서도 시행할 경우 필요한 재정 및 효과 등을 예상하였다. 현재 이 지역 부모들은 아동 1명당 하루 평균 45달러에서 62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연구진이 면담한 부모들 상당수는 한달 수입의 평균 절반 정도가 보육비로 지출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구보고서는 N.W.T.의 보육 시스템이 마치 “가내 수공업” 형태처럼 미성숙한 상태이며 준주 정부가 보육에 지출하는 예산이 캐나다 평균에 비해서 낮은 편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부모가 부담하는 하루 보육료가 7달러 수준이 되게 하려면 현재 지출규모에서 175% 증가한 연간 2,100만 달러의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퀘벡 주의 경우 전체 보육 비용의 85%가 주정부로부터 지원되는데 비해 N.W.T.에서는 단지 1%만이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보조금의 액수나 수혜자 규모뿐 아니라 보육시설의 수 역시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면접에 응한 부모들은 특히 영아를 위한 공간이 부족하며 오랫동안 대기자 명단에 올라간 채 기다려야만 하는 실정과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어떤 부모는 어린이집 문제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야 했다고도 하였다.

준주 내 12개 지역은 인증받은 어린이집이 전혀 존재하지 않은 실정이며, 8개 지역에서는 아예 새롭게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노스웨스트 준주에서 모든 아동이 충분한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려면 최소 718~1,415개의 어린이집이 신설되어야 하고, 250명 이상의 신규 채용 또한 이뤄져야 한다.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공간의 문제인데, 이에 대해 보고서는 학교내 여유 공간을 보육용 공간으로 전용해 활용한다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경제적 효과에 대해 보고서는 보편적 보육 프로그램의 시행이 여성 인력의 더 많은 충원과 긍정적 세수 증대 효과 등을 가져올 것으로 보았다. 어머니 취업률이 1~7% 증가하고, 이는 최소 214,700 달러에서 2,052,775 달러의 추가적인 세수 증대로 연결되며, 소득지원을 위해 지출되는 보조금 등 세출도 감소될 것으로 보고되었다.

비록 연구보고서가 입법 관련 위원회에 상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보편적인 보육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

[1] 캐나다는 10개의 주(洲, province)와 3개의 준주(準州, territory)로 구성된다. 준주는 서쪽 BC주 위쪽부터 차례로 유콘(Yukon), 노스웨스트(Northwest), 누나부드(Nunavut)이다. 노스웨스트 준주의 인구는 2011년 기준으로 약 41,500명이다.

CBC 2015년 9월 29일자

기사출처:http://www.cbc.ca/news/canada/north/universal-childcare-would-cost-n-w-t-20-million-a-year-study-1.3247185

3. 총선 압승 자유당 정부, 기존 육아수당지원제도를 캐나다 아동수당 하나로 통일 예정

양육보조금, 종합육아혜택 등의 여러가지 육아수당지원금을 CCB로 통일,
가계 소득에 따라 비과세로 차등 지급

10월 19일 캐나다 전역에서 연방총선거가 실시되었고 저스틴 트뤼도가 이끄는 자유당이 압승, 과반수가 넘는 다수정부(majority government)를 구성하게 되었다. 당초 치열한 박빙의 승부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캐나다 연방 총선거는 9월말까지도 집권 보수당, 신민주당, 자유당 세 정당의 지지도가 오차 범위 내에서 치열한 접전을 펼쳤으나 10월 이후 자유당의 지지율이 독주하면서 과반수 의석 확보에 성공하였다.

선거 결과, 하원 전체 의석 338석 중 자유당이 184석(의석점유율 54.4%, 득표율 39.5%)을 차지하며 승리했는데, 지난 2011년 총선에서 겨우 34석을 확보해 간신히 명맥을 유지했던 것에 비하면 커다란 승리라 할 수 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종합육아지원혜택(Universal Child Care Benefit)의 액수와 수혜대상을 크게 늘리며 표심잡기에 고심했던 집권 보수당은 기존 159석에서 99석으로 의석수가 줄며 정권유지에 실패했다. 총선 전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며 퀘벡식의 공공보육지원제도를 공약했던 신민주당은 퀘벡주에서만 48석을 잃으며 44석에 그쳐 제3당으로 전락했다. 자유당은 이번 총선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고르게 선거구를 획득했다.

이번 선거에서 자유당이 승리함에 따라 캐나다의 보육과 관련한 제도는 기존의 양육보조금(Canada Child Tax Benefit, 이하 CCTB)와 종합육아혜택(Universal Child Care Benefit, 이하 UCCB) 등 여러 명목으로 지급되던 육아수당지원금 제도는 자유당이 공약했던 바와 같이 '캐나다 아동수당(Canada Child Benefit, CCB)' 하나로 통일되고, 17세 미만 자녀 숫자와 가계 소득 수준에 따라 비과세로 차등 지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변화가 나타날 부분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기존의 UCCB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게 지급되었던 것과 달리, CCB는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특히 "부유층' 가정은 더 이상 육아지원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자유당 공약에 따르면 CCB를 받지 못하는 부유층 기준은 자녀 1명이 6세 미만일 때는 19만4600달러 이상, 그리고 6~17세 경우는 16만4200달러 이상이다. 가구 연 소득 20만 달러 이상이면 자녀 수와 상관없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둘째, 부유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육아수당지원금 수령액이 증가한다. 6세 미만은 최대 월 533달러, 6~17세까지는 최대 월 450달러를 수령하는 데, 부모의 연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양육보조금이 증감된다.

셋째, 모든 육아지원수당은 비과세 소득(non-taxable income)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득신고시 합산하지 않아도 되지만, 올해 보수당 정부로부터 받은 UCCB는 과세소득으로 내년도 세무 정산을 할 때 보고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공적 지원 강화를 통해 가정의 보육료 부담을 낮추는 '하루 보육료가 15달러인 백만개의 어린이집(1 million $15/day spaces) 정책'을 주장했던 신민당의 공공보육정책이 승리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였으나, 선거 결과 퀘벡식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려고 한 신민당이 집권에 실패함에 따라 전국적인 시행은 차후로 미뤄지게 되었다.

최근 캐나다의 경제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적자 재정을 편성해서라도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는데 집중하겠다"는 자유당의 공약이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지급 형태'보다는 '현금 지급 형태'의 보육 서비스 지원을 캐나다 유권자들은 보다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앨버타 주 정부가 내년부터 퀘벡식 공공보육지원정책 시행을 공표하였고, 이번 선거를 통해 퀘벡식 모델에 대한 유권자들의 열망도 공식적으로 표출된 만큼 향후 캐나다의 육아지원제도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게 될 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CBC, Canadian Press, Financial Post 등 출처:

(1) 자유당 정부의 CCB 내용 및 수령예상액 관련 웹페이지
http://www.liberal.ca/realchange/helping-families/

(2) 신민당의 공약 관련
http://news.nationalpost.com/news/canada/canadian-politics/justin-trudeau-unveils-his-plan-tax-hikes-on-the-rich-to-boost-child-care-benefits /
http://www.thespec.com/opinion-story/5749148-the-spectator-s-view-at-last-child-care-on-the-election-agenda/

4. 신민당 주도 매니토바 주정부, 신민당의 연방선거 참패에도 '보편적 보육접근권 실현' 공약 이행

보육수용인원 확대, 영유아교사에 대한 지원, 보육료 부담 완화를 통한 보육서비스 이용가능성 확대 등 세 가지 공약을 위한 정책집행 강조

퀘벡식의 공공보육지원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신민당(New Democratic Party, NDP)이 10월 19일 연방선거에서 참패했지만, 신민당이 주도하고 있는 매니토바에서는 비싼 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낮춰 모든 가정에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이른바 '보편적 보육접근권' 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들이 집행되고 있다. 11월 20일 매니토바 주정부의 가족서비스부 장

관인 케리 어빈-로스(Kerri Irvin-Ross)는 2015년 의회개원식 칙언(勅語, throne speech)에서 발표된 보육 관련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매니토바 주정부가 공립학교와 제휴를 맺은 보육센터 네 곳을 신설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매니토바주의에서의 '보편적 보육접근권' 공약은 보육수용인원 1만2천명 추가 확보, 영유아교사에 대한 지원, 보다 많은 가정에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 확대의 세 가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어빈-로스 장관은 "우리는 보육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가정에서 누구나, 큰 비용부담 없이 양질의 보육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전념해 왔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보육시설에 보낼 수 있도록 학교, 대학, 신규 주택개발지역 등에 보육센터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네 곳의 보육센터는 대학 2곳(Manitoba Institute of Trades and Technology, Rivers Collegiate), 학교 2곳(R.F. Morrison School, Strathclair Community School)에 세워지며, 158명의 영유아를 수용하게 된다.

매니토바 보육연합회의 상임이사인 팻 웨지(Pat Wege)는 "인가받은 시설에서의 보육수용인원 부족은 특히 젊은 부부들에게 큰 문제이다. 보육시설 입소 대기시간을 줄이겠다는 매니토바주의 야심찬 계획은 많은 이들에게 호응을 얻을 것이다. 양질의 시설과 숙련된 교사를 확보하고 보육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에 함께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육교사 인력확충과 관련하여 어빈-로스 장관은 현재 영유아교사 인력 배출규모를 늘리고 있으며, 2016년 1월부터 보육시설에서 교사에게 지급하는 급여 및 장기근속수당을 늘릴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회계연도(2015-2016) 내에 총 900명의 아동분에 대한 예산지원을 통해 보육시설의 인건비 및 환경개선비 보조 목표를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올해 2월, 매니토바 주정부는 기존의 보육시스템을 점검하고 세 가지 보육접근권 강화 공약 실현을 위한 제안서를 2015년까지 제출하도록 '영유아학습 및 보육 관련 위원회'를 발족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어빈-로스 장관은 "우리의 목표는 2023년까지 '보편적 보육접근권'을 실현하여 매니토바주가 캐나다 내에서 리더가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와 긴밀히 협조하며, 퀘벡 다음으로 보육시설 이용료가 저렴한 곳으로 만들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지난 10월 19일 연방총선거에서 제1야당이었던 신민당은 한때 여론조사결과 1위로 연방집권을 꿈꾸었으나 의석수가 60석 가까이 줄어 40석을 간신히 넘는 참패를 기록했다. 신민당의 참패에는 경기악화 상황에서 공공보육지원 등 재정부담이 큰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는 가운데, 신민당이 집권한 매니토바(Manitoba), 앨버타(Alberta) 두 주정부가 자유당 집권 연방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기존의 퀘벡식 '보편적 보육접근권' 공약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 주목된다.

CBC 및 매니토바 주정부 보도자료 2015년 11월 20일자
기사출처: http://news.gov.mb.ca/news/index.html?item=36831

5. 보육서비스, 사회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학업성취

[연구논문] 보육서비스, 사회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학업성취 (게재: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연구자: Laurin, Julie C.; Geoffroy, Marie-Claude; Boivin, Michel; Japel, Christa; Raynault, Marie-France; Tremblay, Richard E. & Côté, Sylvana M. (퀘벡주 몬트리올 대학교, 맥길대학교 등 공동연구팀).

연구목적: Population level에서의 보육서비스(child-care services, CCS)가 초기청소년기까지 학업 성취에 있어서의 사회적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함.

연구방법: 퀘벡주의 "하루 5달러 보육료 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한 1997~1998년 사이에 캐나다 퀘벡주에서 태어난 신생아 2120명을 대상으로 한 Quebec Longitudinal Study of Child Development (QLSCD) 자료를 이용. 12년 종단 코호트 자료 분석(최종 분석 n = 1269). 보육서비스(CCS)와 관련해 두 가지 변수를 개발, 측정함.

- 보육서비스 강도("intensity") : 보육서비스 이용시간이 적음/보통/매우 많음

- 보육서비스 형태(센터 중심 보육서비스 노출 정도, "center-based CCS type"): 센터 중심 보육서비스 일찍부터 시작함/늦게 시작함/이용해본 적 없음

연구결과: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정의 아동들 중, 보육서비스의 형태에 관계없이, 보육서비스 강도가 높은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읽기(standardized effect size [ES] = 0.37), 쓰기(ES = 0.37), 수학 (ES = 0.46) 에서 더 나은 학업성취를 나타냈음.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아동들 중 센터 중심 보육서비스를 받은 아동이 센터중심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은 아동에 비해 읽기 (ESearly onset = 0.68; ESlate onset = 0.37), 쓰기 (ESearly onset = 0.79), 수학 (ESearly onset = 0.66; ESlate onset = 0.39) 에서 더 나은 성취를 보였음. 더욱이 센터 중심 보육서비스를 조기에 이용하는 것은 세 영역 모두에서 사회경제적 수준의 '낮음'과 '중간' 수준 격차를 제거하는 효과를 가져옴(읽기, 쓰기, 수학 각각 ES = -0.01, 0.13, -0.02.) 이 결과는 출생부터 학교입학까지 여러 가지 아동·가족 변수들을 통제하여 얻은 것임.

결론: 보육서비스는 형태에 관계없이 초기청소년기까지 학업성취에 있어서의 사회적 불평등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음. 한편, 센터 중심 시설에서의 보육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사회적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을 넘어 제거하는 데까지 기여할 수 있음.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아동들이 보육서비스 이용, 그 중에서도 특히 센터 중심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극 권장할 만함.

자료 출처: http://pediatrics.aappublications.org/content/pediatrics/early/2015/11/18/peds.2015-0419.full.pdf

교육·보육 비용

1. 보수당 정부, 30억 달러에 달하는 종합육아혜택(UCCB) 지원금 일괄 지급

캐나다 역사상 가장 큰 현금지급 복지지원금 - 효과 등을 둘러싼 논쟁 가열
핵심적인 총선 이슈로 부각 가능성

캐나다 연방 총선거를 3개월 앞둔 7월 20일,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왔던 종합육아혜택(Universal Child Care Benefit, 이하 UCCB) 지원금이 보수당 정부 주도로 지급되면서 정치적 의도와 실제 효과 등을 둘러 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17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기존의 Universal Child Tax Credit 대신,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게 6세 미만 자녀 1명당 매달 160 캐나다달러, 6~17세 자녀엔 60달러 씩 총 30억달러로 늘린 새로운 UCCB 지원금 7개월치(1월~7월분)를 7월 20일 각 가정 계좌로 입금 또는 수표로 발송했다. 이에 따라 각 가정에서는 자녀 한 명당 420달러에서 520달러를 받게 되었고[1], 이는 캐나다 역사상 현금으로 직접 지불된 복지 지원금 중 최대 규모로 손꼽힌다. 이를 두고 고용부 장관인 피에르 포이리브르(Pierre Poilievre)는 “7월의 크리스마스”라며 자찬했고[2], 하퍼 총리는 “이 돈으로 자녀를 위한 보육 비용에 보탤 수 있고, 나아가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UCCB 지급과 관련해서는 총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적 자금인 세금을 특정 정당의 정치적 목적과 의도에 사용한 전횡이라는 지적과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번 UCCB 지급액수로 볼 때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선거구 중 상당수가 총선거에서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손꼽히는 앨버타 주 및 토론토 외곽 지역 선거구(riding)에 치중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전통적으로 보수당을 지지해왔던 선거구라는 분석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Canadian Press에 따르면, UCCB로 인해 증액된 금액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총 20개 선거구

중 17개 선거구가 전통적인 보수당 지지 지역이었다.[3]

최근 조사된 정당별 지지도 조사를 보면, 2013년 중반 이후 지지율 1위를 기록하던 자유당 지지도가 2015년 들어 하락해 3위를 기록했고, 자유당에 역전당해 2위를 기록하던 보수당은 UCCB 정책 발표 이후인 2014년 말부터 지지율이 크게 상승했다가 5월부터 꺾이기 시작하며 현재는 신민당과 비슷하거나 열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신민당은 올해 2월부터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7월말을 기준으로 집권 보수당과 비슷하거나 다소 우세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4] 지지율 3위였던 신민당이 강력한 집권 예상 정당으로 부상한 데에는, 멀케어(Thomas Mulcair) 신민당 대표가 "신민당은 UCCB와 같은 현금지급 외에, 어린이집에 대한 공적 지원 강화를 통해 가정의 보육료 부담을 낮추는 '하루 보육료가 15달러인 백만개의 어린이집(1 million $15/day spaces) 정책'에 남은 예산을 보다 집중하겠다"고 공약한 것이 유권자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5] 이에 따라 하퍼 정부는 UCCB 지급을 통해 보육에 대한 보수당의 깊은 관심과 과감한 정책적 결단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맞대응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UCCB 지급에 따른 가정의 수입증대 및 경제활성화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6세~17세 아동을 위해 매달 60달러의 UCCB가 새로 지급되는 것처럼 정부에서는 홍보하지만, UCCB로 인해 매달 28달러씩 지급되던 기존의 Universal Child Tax Credit이 폐지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가된 보조금은 32달러에 그친다. 더욱이 UCCB는 종합소득신고시에 합산해야 하는 과세수입(taxable income)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별 세율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전국 평균으로 볼 때 실질적인 UCCB 수령금액은 연소득이 2만 달러인 가정에서는 매달 19달러, 연소득 4만5천 달러인 경우에는 14달러, 연소득 9만 달러인 경우에는 7.5달러에 그친다.[6] 더욱이 7월에 한꺼번에 목돈이 지급된 것이 과연 지속적인 경제활성화에 효과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도 존재한다.

다가올 선거에서 아동 보육정책은 집권여당과 야당 사이에 그 방향성을 놓고 치열한 대립을 야기할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된다. 보수당 정부는 모든 가정에 대해 일괄적으로, 현금 형태로 정액 지급하는 정책을 선호하는 반면, 신민당과 자유당은 저소득층을 선택적으로 집중 지원하고, 현금지급 대신에 보육시설 등에 대한 공적지원을 통한 보육비용 부담 경감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7]

UCCB를 둘러싼 아동 보육정책과 논쟁이 향후 캐나다 유권자의 선택, 나아가 캐나다의 육아지원정책의 방향성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1] 6세~17세 자녀의 경우, 매달 60달러씩 7개월 치인 총 420달러가 지급되었다. 한편, 만 6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기존에 6월까지 지급되었던 매달 100달러의 UCB(Universal Child Benefit)에 더하여 미지급

된 60달러 인상분 6개월 치와 새로운 UCCB 7월분 160달러를 합해 총 520달러가 지급되었다.

[2]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산타 클로스 국가의 발흥(the rise of the Santa state)"이라고 풍자하기도 했다. (http://ottawacitizen.com/news/politics/editorial-the-rise-of-the-santa-state)

[3] http://www.huffingtonpost.ca/2015/07/19/tory-suburban-ridings-ga_n_7828214.html/
http://www.cbc.ca/news/politics/conservative-suburban-ridings-gain-most-from-enriched-child-benefits-cp-1.3159439

[4]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http://www.electionalmanac.com/ea/canada-election-polls/)

[5] https://twitter.com/thomasmulcair/status/555733612486995970 /
http://www.thespec.com/opinion-story/5749148-the-spectator-s-view-at-last-child-care-on-the-election-agenda/

[6] http://www.cbc.ca/news/politics/3-things-to-know-about-the-uccb-payments-impact-1.3161108.
(특히 뉴스보도영상 참조.)
http://business.financialpost.com/personal-finance/taxes/it-may-be-universal-but-the-new-child-care-benefit-doesnt-benefit-everyone-equally

[7] http://news.nationalpost.com/news/canada/canadian-politics/justin-trudeau-unveils-his-plan-tax-hikes-on-the-rich-to-boost-child-care-benefits /
http://www.thespec.com/opinion-story/5749148-the-spectator-s-view-at-last-child-care-on-the-election-agenda/

(1) UCCB 혜택을 많이 받는 선거구 대부분이 집권 보수당 지지 지역이라는 분석 결과 관련
-http://www.huffingtonpost.ca/2015/07/19/tory-suburban-ridings-ga_n_7828214.html

-http://www.cbc.ca/news/politics/conservative-suburban-ridings-gain-most-from-enriched-child-benefits-cp-1.3159439

(2) 정치적 의도를 갖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UCCB를 지급했다는 지적 관련
-http://www.cbc.ca/radio/thehouse/stephen-harper-s-11th-hour-senate-conversion-1.3162293/uccb-cheques-useful-policy-or-pre-election-tactic-1.3162299

-http://www.cbc.ca/news/business/universal-child-care-benefit-ads-misleading-families-say-critics-1.3172927

-http://ottawacitizen.com/news/politics/editorial-the-rise-of-the-santa-state

3) UCCB 지급액이 사실상 그리 크지 않다는 점에서 오히려 기존의 정책보다 낫지 않다는 분석 뉴스
-http://www.cbc.ca/news/politics/3-things-to-know-about-the-uccb-payments-impact-1.3161108

-http://business.financialpost.com/personal-finance/taxes/it-may-be-universal-but-the-new-child-care-benefit-doesnt-benefit-everyone-equally

(4) UCCB 등 아동보육정책이 총선거의 중요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 관련
-http://news.nationalpost.com/news/canada/canadian-politics/justin-trudeau-unveils-his-plan-tax-hikes-on-the-rich-to-boost-child-care-benefits /
-http://www.thespec.com/opinion-story/5749148-the-spectator-s-view-at-last-child-care-on-the-election-agenda/

2. 교과연수일(Ped-day)의 학교내 보육시설 이용 요금 인상 예상

퀘벡 주정부가 '교과연수일(pedagogical day)'에 운영되는 학교내 보육 서비스 보조금 예산을 절반으로 축소함에 따라 학부모의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Ped-day"라고도 부르는 이 교과연수일은 교사들을 위한 교육워크숍 및 기타 전문성계발 활동을 목적으로 하며, 많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이 날 등교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퀘벡에서 이 교과연수일 기간 중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내 보육서비스 이용요금은 하루당 8달러였다. 한편 2014-2015 학년도의 경우 각 교육청은 주정부로부터 아동 1명당 교과연수일 하루마다 16.39 달러를 보조금으로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이 예산이 7.93달러로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20일로 예정된 내년 교과연수일 중 11일 정도가 부족해진 예산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퀘벡 주정부는 부족분만큼을 학부모로부터 받을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퀘벡주 남서부 지역을 관장하는 뉴 프론티어 교육청은 학부모로부터 기존의 비용 이상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대부분의 다른 교육청들은 주정부의 지속적인 예산 삭감에 대비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퀘벡주 '학교내 보육서비스 연합'의 대변인인 Gabrielle Neveu-Duhaime 는 주정부의 예산 삭감은 많은 학부모에게 충격적인 소식이며, 특히 이러한 방침이 관계자 및 학부모가 휴가 중이었던 7월 말에 발표되었다는 점이 놀랍다고 하였다. 더욱이 얼마나 많은 교육청에서 교육연수일의 보육서비스 비용을 추가적으로 징수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하루당 보육서비스 비용을 기존의 두 배인 약 16달러로 인상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퀘벡주 교육부 대변인은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퀘벡의 'Quebec English School Boards Association (QESBA)'은 학부모들에게 각 학교에 문의하기 전에 우선 개별 교육청에 관련 사항 및 비용에 관해 문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CBC 2015년 8월 12일자
기사출처:http://www.cbc.ca/news/canada/montreal/ped-day-daycare-fees-to-go-up-after-quebec-cuts-funding-1.3188097

3. 캐나다 주요도시 보육비용 급격히 상승: 영아보육료 도시간 격차 최대 월 1,562 달러에 달해

조사 및 발표기관 : Canadian Centre for Policy Alternatives(CCPA)
캐나다 정책대안센터(CCPA), 캐나다내 주요 27개 도시에서의 보육료 중위값 조사결과 발표

캐나다 정책대안센터(Canadian Centre for Policy Alternatives, CCPA)는 12월 10일 캐나다내 주요 27개 도시에서 영아(infants)[1], 유아(toddlers)[2], 미취학 아동(preschoolers)[3]을 대상으로 보육시설 이용료 중위값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보조금 형태 등도 함께 고려되었다. 조사 결과 각 주별, 각 도시별로 보육 제도의 형태와 보육시설 이용료가 매우 달랐지만, 전반적으로 보육료는 높은 반면 제대로 정부감독을 받는 시설의 수는 부족했다.

CCPA의 선임경제연구원인 데이비드 맥도널드(David Macdonald)는 “캐나다 도시간의 보육료 격차는 큰 편이다. 예를 들어 수도인 온타리오주 오타와에 사는 부모는 미취학 아동(preschooler) 한 명을 위해 매달 987달러를 쓰는 반면, 바로 강 건너인 퀘벡 주의 가티노(Gatineau)시의 부모는 174달러를 쓴다. 보육에 관한 것은 주 정부의 관할이긴 하지만, 캐나다 전체에 있어서 보육료 격차를 줄이고 보육시설 이용가능성을 높이는 일에 있어선 분명 연방정부의 리더십과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주요 조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보육시설 이용료가 가장 높은 도시는 온타리오주 토론토(Toronto)로서, 영아는 $1,736, 유아는 $1,325, 미취학아동은 $1,033이었다.

- 토론토에서 유아 1명, 미취학아동 1명 총 2명의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일년에 보육시설 이용료로 28,300달러를 지불한다. 이것은 토론토에서 자녀를 둔 부모 가정의 연간 세후소득(after-tax income) 중위값의 48%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설사 이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 하더라도, 공공 차원의 관리를 받는 보육센터 등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긴 대기순번을 참고 기다려야 한다.

- 미취학아동을 기준으로, 보육시설 이용료가 가장 높은 상위 7개 도시는 토론토, 마크햄을 비롯해 모두 온타리오주의 도시들이었다(Toronto, Markham, Ottawa, Vaughan, Mississauga, Brampton, London).

- 보육시설 이용료가 가장 낮은 도시들은 영아, 유아, 미취학아동 모든 카테고리에서 공히 월 $174를 기록했는데, 이 도시들은 모두 “하루 7.3달러 보육료”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퀘벡 주의 도시들이었다(Gatineau, Laval, Montreal, Longueuil, Quebec).

- 보육시설 이용료는 작년보다 평균 5% 올랐는데, 이는 물가상승률의 5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2014년 이후 토론토에서는 보육시설 이용료가 월 56달러 올랐다.

- 보육시설 이용료는 이처럼 높은 편이지만,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평균 급여는 다른 직종에 비해 낮은 편이다.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영유아교사(early child care educators)와 가정보육교사(home care providers)의 연평균 수입은 각각 $25,000와 $18,000였다.

- 저소득 가구를 위한 보조금 혜택은 보육료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둔 빈곤계층 가정의 소득 중위값인 연소득 30,400달러 가정을 기준으로 할 때, 보조금을 받아서 내야 하는 보육시설 이용료는 도시별로 볼 때 낮은 경우는 87달러(토론토) 내지 105달러(세인트존스(St. John’s))였고, 높은 경우는 396달러(캘거리) 내지 450달러(새스커툰(Saskatoon)) 정도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캐나다의 보육시설 이용에 있어 문제는 (1) 높은 보육시설 이용료 부담, 그리고 (2) 보육시설 정원 부족으로 인한 긴 대기시간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비싼 보육시설 이용료에도 불구하고 자리만 있다면 보육시설에 보내겠다고 응답한 부모들의 자녀수만 약 100만 명에 이른다. 결국 관건은 “교사의 의욕을 높이고 시설확충을 통해 질을 높이면서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육의 양적,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며, 이를 위해 연방과 주의 노력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맥도날드 연구원은 말한다.

---

[1] 생후 18개월 미만

[2] 18개월 ~ 36개월(만3세)

[3] 만3세 ~ 만5세

2015년 12월 2일자
기사출처: CCPA의 조사결과 발표 보도자료
https://www.policyalternatives.ca/newsroom/news-releases/new-study-reveals-most-and-least-expensive-canadian-cities-child-care

4.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민, 보육비용 직접지원보다 보육서비스 지원강화를 더 선호

BC주민 대상 보육비와 보육서비스 선호도 조사 결과

캐나다 연방 총선거[1]가 몇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육아지원과 관련해 British Columbia(BC) 주민(洲民)은 정부의 보육비 직접지원보다는, 보편적 성격의 보육 서비스 지원강화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 인사이트 웨스트(Insights West)가 18세 이상 BC주민 862명을 대상으로 연방 및 주 정부의 보육비 직접지원정책, 그리고 이른바 '퀘벡주 모델(Quebec's model)'로 불리는 '하루 10달러 보육(10$aDay)' 등의 보육 서비스 강화정책이 실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지 물은 설문조사[2]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먼저 보육비 직접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의 종합육아혜택(Universal Child Care Benefit, 이하 UCCB) 증액정책과 BC주정부의 영유아세금혜택(BC Early Childhood Tax Benefit)에 대해 질문하였다. 첫 번째로 보수당(Conservative Party)이 집권하고 있는 연방정부가 올해부터 현재 6세 미만 아동 1인당 지급하는 금액을 월 100달러에서 160달러로 늘리기로 한 정책이 육아에 도움되는지에 대해 BC주민 62%는 "도움된다"고 말했고, 33%가 "도움되지 않는다"라고 의견을 밝혔다.[3] 두 번째로 BC자유당(BC Liberals)이 집권하고 있는 BC주정부가 발표한 월 55달러 유아 보육지원금 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50%가 도움된다, 45%가 도움되지 않는다고 밝혀 호·불호가 갈렸다.[4]

다음으로 보육서비스와 관련해, 부모가 지불하는 보육시설 이용비용을 낮추고, 영유아를 위한 공간을 늘리고,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강화 및 봉급인상을 골자로 하는 '하루 10달러 보육(10$aDay)' 정책안에 대해 82%가 "도움된다", 11%가 "도움되지 않는다"고 답해 보육서비스 강화에 대한 높은 선호를 나타냈다.

이처럼 UCCB 증액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과 '하루 10달러 보육(10$aDay)' 정책안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 사이에는 20%의 격차가 나타났다. 나아가 "자녀를 육아지원시설에 보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BC주민들은 "부모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낫다(22%)"는 응답보다는 "육아지원 서비스에 자금지원을 하는 것이 낫다(64%)"고 응답한 비율이 세 배 가까이 높아, 보육비용의 직접지원보다는 보육 서비스 지원강화를 더 선호하였다.

UCCB증액안은 연방집권 보수당(Conservative)정부가 올해부터 시행을 예고한 정책이며,[5] 보육시설의 공간 확대 및 보육교사의 교육강화·봉급인상은 야당인 자유당(Liberal)과 신민당

(New Democratic Party, NDP)이 각각 국립 공공보육정책이란 명칭으로 이번 연방 총선을 앞두고 공약한 내용이다. 야당은 하루 이용료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보수당 정부의 UCCB 증액정책을 취소하고 그 재원으로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6]

한편, BC주 등에서 최근 몇 년째 이슈화되고 있는 '하루 10달러 보육(10$aDay)' 정책은 퀘벡주에서 주정부 차원에서 1997년 처음 도입된 '하루5달러 보육($5-a-day daycares)'을 모델로 하고 있다. 퀘벡주의 이 정책은 보육시설에 대한 공공지원을 강화하여 부모의 부담을 낮추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 물가인상률 및 재정부담 증가로 인해 2004년 7$, 2014년 7.3$로 두 차례 인상된 바 있다.

---

[1] 연방 하원과 상원을 선출하는 선거로, 2016년 10월 19일 실시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http://en.wikipedia.org/wiki/42nd_Canadian_federal_election)

[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3%포인트.

[3] 연방정부는 6~17세 자녀 1인당 60달러를 올해부터 UCCB 명목으로 추가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UCCB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http://www.cra-arc.gc.ca/bnfts/uccb-puge/menu-eng.html)

[4] BC주정부는 올해 4월부터 BC주 유아세제혜택(The BC Early Childhood Tax Benefit)이란 명칭으로 6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5달러를 추가 지급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http://www.mcf.gov.bc.ca/childcare/tax_benefit.htm)

[5] 최근 연방총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2011년 총선 승리후 집권 보수당의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여 2013년 4월경에는 자유당에게 역전을 당했다. 이에 2015년 총선을 앞두고, 2014년 후반기에 UCCB 증액정책을 발표하게 되었는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최대 14%까지 벌어졌던 보수당과 자유당의 격차는 UCCB 증액정책이 시행되는 2015년에 들어서면서 크게 좁혀졌고, 총선을 여섯 달 가량 앞둔 3월 현재 박빙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http://www.electionalmanac.com/ea/canada-election-polls/)

[6] 흥미로운 점은, BC주의 경우 과거 퀘벡주 모델과 같은 공공보육서비스 강화 요구가 이슈화된 적이 있었으나, 2013년 당시 BC주의 자유당 정부는 이에 반대했다는 사실이다. 2013년 당시 BC자유당 당수이자 BC주 수상인 크리스티 클락은 "퀘벡주 모델과 같이, 부유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에게 똑 같은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보육제도(Universal childcare) 강화는 비용도 많이 들 뿐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며 반대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http://www.timescolonist.com/news/local/affordable-child-care-promised-in-tuesday-budget-but-10-a-day-system-ruled-out-1.75658)

캐나다 여론 조사 기관 Insight West 2015년 3월 5일자
기사출처:http://www.insightswest.com/news/british-columbians-want-a-real-investment-in-child-care/

일·가족 양립 정책

1. 맞벌이부부의 비율, 1976년~2014년 동안 두 배로 증가

이제 맞벌이 부모는 캐나다 내에서 실질적인 대세가 되었다.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에 따르면 1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의 69%가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976년 조사에서는 36%의 부부만이 맞벌이였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퀘벡주의 경우 가정에 머무는 부모(stay-at-home parent)의 비중이 1976년 59%에서 2014년 13%로, 다른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감소하였다. 조사는 2014년과 1976년에 2800만 가정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진행되었는데, 자녀를 둔 가정의 수는 일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관련해, 특히 1970년대와 80년대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유입은 중산층 가정의 확대와 연관이 깊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것은 1976년처럼 한 사람의 수입에만 의존해도 가계운영이 가능한 가정이 이제는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는 보육비용의 문제를 지속적이고 연례화된 사회적 이슈로 만들었다. 무엇보다 올 초 강력히 추진된 이분이승방식(二分二乘方式, income-splitting)의 세금우대정책[1] 등이 이제는 더 이상 캐나다 가정의 다수가 아니게 된 홑벌이 가정에게 적합한 것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홑벌이 부부 가정의 비율은 1976년 59%에서 2014년에는 27%로 감소하였다. 이것은 캐나다 전체로 볼 때 73만6천쌍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그런데 1976년과 비교해 볼 때 2014년의 경우 부모 중 가정에 머무는 사람이 아버지인 경우가 크게 증가하였다. 1976년에는 홑벌이 부부 중 2%만이 가정에 머무는 사람이 아버지라고 응답했지만 2014년에는 11%로 증가했다.

1976년에는 맞벌이 부부 중 약 2/3가 부모 양쪽 모두 정규직(full-time)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2014년에는 3/4으로 증가하였다.

16세 이하 자녀를 한 명 이상 둔 편부모의 경우, 1976년 약 30만 가구에서 2014년 70만 가구로 조사되었다. 이 중 편모의 69%, 편부의 82%가 고용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

[1] 부부의 소득합계를 2로 나누고, 그 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세금을 2배로 하는 방식이다. 남편만의 소득이라 할지라도 부부 공유의 재산으로 보고, 소득의 절반은 처의 소득이라 생각하는 데 기초를 두고 있다. 이렇게 하면 소득 전부를 남편의 것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적어진다. 소득세의 과세 단위에는 소득을 얻는 개인마다에 과세하는 소득자단위와 소비생활을 함께하는 단위마다에 과세하는 소비단위가 있다. 이승이분방식은 소비단위과세의 한 방법으로 미국·프랑스·독일 등에서 채용하고 있다. (출처 : 두산백과)

CBC 2015년 6월 24일자
기사출처: http://www.cbc.ca/news/business/2-income-families-nearly-doubled-from-1976-to-2014-1.3125996

2. 저스틴 트뤼도 자유당 대표, 새로운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 계획 발표

캐나다 연방총선거를 두 달여 앞둔 가운데,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자유당의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대표는 '보다 유연한 근무환경' 플랜 등을 포함한 "가족을 위한 신(新) 일-생활 균형(new work-life balance for families)" 공약을 발표했다. 근무환경 및 육아휴직에 관한 연방 차원의 새로운 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이 공약안에 따르면 근로자는 보다 유연한 근무시간 조정 또는 재택근무를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사용자는 공식적인 문서에 의해 이러한 근로자의 요구에 답변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것은 영국 등 유럽국가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과 외형상 유사하다. 이를 위해 트뤼도 대표는 캐나다 노동법(The Canada Labour Code) 개정을 추진하고, 자유당 집권시 연방 차원에서뿐 아니라 주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방 차원에서도 이와 같은 근로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육아휴직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옵션을 제시했다. 첫 번째 방안은 새로 부모가 된 근로자에게 최대 18개월 내의 기간 동안 휴직 및 근무시간 비율에 따른 타임 오프를 갖는 것이다. 근로자는 18개월 내에서 자신이 필요한 만큼 휴직을 했다가 직장에 복귀한 후 복귀시간에 비례해 다시 휴직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방안은 출산 수당과 결부시켜 최대 18개월까지의 보다 긴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것이다. 트뤼도 대표는 이 방안들이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고용 안정성과 관련해 매년 1억2500만 달러 상당의 경제적 안정을 캐나다 가정에 가져다 주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이 방안이야말로 고용보험의 인상 없이 근무유연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캐나다에서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는 부모에게는 최대 50주까지의 고용보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Université du Québec à Montréal 경제학과의 캐서린 해이크(Catherine Haeck) 교수는 소득이 많은 가정에서는 새 공약에 따른 육아휴직을 더 많이 쓰려 하겠지만, 저소득층에서도 이러한 계획이 예상처럼 효과적일지는 의문이라고 하였다.

한편, 신민당(NDP)과 보수당은 유연근무제 확대 및 육아휴직 기간의 연장이 대부분의 근로자, 그리고 특히 사용자 입장에서 순탄하게 받아들여질지 의문이라며 자유당 공약의 현실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CBC 2015년 8월 19일자

기사출처: http://www.cbc.ca/news/politics/justin-trudeau-pitches-new-parental-leave-proposals-flexible-work-plan-1.3195987

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

1. 보육 관련 전문가들, 퀘벡식 보육 프로그램의 부정적 결과에 초점을 둔 최근 연구결과에 의문 제기

퀘벡식 보육시스템에서 성장한 아동이 다른 주의 아동에 비해 부정적 결과를 보였다는 최근 연구결과의 비교방법, 의도성에 문제있다고 지적

퀘벡식 보육시스템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다른 주의 아이들에 비해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다는 최근 연구결과에 대해 보육 관련 전문가들은 논리적 비약과 왜곡의도에 대한 의문과 우려를 제기했다.

최근 발표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저비용, 보편적인 퀘벡식 보육 시스템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다른 주의 아이들에 비해 학업성취는 높지만 건강, 삶의 만족도, 범죄율에 있어서는 더 나쁜 결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이 연구에서 비교 대상으로 삼은 아동 중에는 퀘벡식의 저비용 보육 프로그램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아동들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는 데다가, 그 비율이 절반 가까이나 된다는 점에서 정확한 비교결과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몬트리올 퀘벡대학교(the University of Quebec at Montreal)의 발달심리학 교수이자 퀘벡주 보육의 질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던 크리느타 자펠(Christa Japel) 교수는 “비교 대상자의 절반이 퀘벡식 보육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아동이라면, 문제행동의 증가를 과연 보육과 연계시켜 결론지을 수 있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9월 21일 월요일 온라인을 통해 발표된 이번 연구는 퀘벡식 보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이면서 동시에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킨 두 번째 연구이다. 이번 연구결과 발표가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은 연방선거가 한창 진행중인 시점에서, 그것도 신민당(NDP)이 퀘벡식의 보편적 보육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연방과 주 차원에서 공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후에 나왔다는 점 때문이다.

이미 몬트리올 퀘벡 대학교의 피에르 포틴(Pierre Fortin) 경제학 교수가 퀘벡식 보육 프로그램이 여성 취업률 및 가구 소득증대 등으로 인해 충분한 경제적 효과까지 유발할 있다는 연구결과가 알려져 있지만 여전히 그 재정문제와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진행 중이다. 그렇지만 퀘벡식 보육 프로그램의 질에 대해서 자펠 교수는 “주정부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에서 보육 서비스를 받은 퀘벡 아이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육에 관한 전국 규모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Child Resource and Research Unit'의 디렉터인 마샤 프렌들리(Martha Friendly)는 9월 21일 발표된 연구에 대해 "그 연구를 진행한 사람들은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의 자료로부터 아동 관련 대규모 데이터셋을 사용했는데, 이 때 퀘벡주 아이들의 절반만이 퀘벡식 보육 프로그램을 체험했다는 점을 통제하지 않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과장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왜 이 연구에서 기존의 다른 연구들과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면서 이것이 마치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하는 격"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CBC 2015년 9월 22일자
기사출처: http://www.cbc.ca/news/canada/montreal/experts-question-contentious-study-on-outcomes-in-quebec-s-daycare-program-1.3239625

프랑스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및 정책

1. 어린이집 자녀를 지켜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 연결된 보육원 » 개념은 '바빌루 그룹'이 작년 9월 고안해 낸 것으로서, 그들은 부모들과 아이들의 연결을 강화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한 바 있다. 주간지 르 파리지앙은 지난 화요일, 그들의 이러한 계획이 성공했음을 전했다.

이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자는, 이러한 시도들이 부모들과 육아문제의 인간적인 관계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보육담당자들로부터 일주일에 몇 차례에 걸쳐 사진들을 전달 받는 방식의 이 어플리케이션은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의 발달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다.

한 보육원 원장은 르 파리지앙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진들은 엄격하게 선별된 후 부모들에게 전송되며, 아이의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닌, 영아들의 발달과정 혹은 보육원의 일상들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아동 전문가 로헝스 라모는 르 파리지앙을 통해 이러한 시도는 아주 위험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보육원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육원은 아이들이 타인과 만나게 되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엄마나 아빠의 존재 없이 무언가를 배우는 곳이다."

프랑스 뉴스 채널 BFMTV 2015년 5월 2일자
기사출처:http://www.bfmtv.com/societe/une-application-permet-de-regarder-son-enfant-a-la-creche-873029.html

2. 어린이집에 아이를 늦게 데리러 오는 부모에게 5유로의 벌금 부과

아르멍띠에시는 부모들이 보육원에 아이들을 늦게 데리러 오는 것에 대처하기 위해 새학기부터 아이를 데려가는 시간에 많이 늦는 부모들에게 5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시의원 장-미셸 몽빼이에 의하면, 시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들이 늦는 것을 반복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시의회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고 한다.

"부모의 지각은 일상적인 것은 시에서 아이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노동을 강제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부모는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6시까지 아이를 맡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합니다. 아이들은 10시간 반동안 맡겨집니다. 이 시간 동안 부모들이 자신들의 시간을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복해서 늦는 일은 없어야만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각이 반복되는 것은 아이들을 보살피는 이들의 삶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들 역시 종종 자신들의 아이들을 데리러 가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무시간이 길어진다면 그들 또한 늦게 아이들에게 가게 됩니다. 또한 그들의 초과근무수당은 시의 지출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벌금은 급작스럽게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복해서 지각하는 부모들은 구두로 경고를 받고, 그 다음은 지금까지와 같이 서면으로 경고를 받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늦는다면 벌금부과가 예고되며, 이 후 1회 지각에 5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보호와 공공 서비스의 질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는 융통성을 바탕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돌발적인 일로 인해 늦게되는 부모들의 지각을 이해하는 데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프랑스 뉴스 채널 Le Plus 2015년 7월 9일자
기사출처:http://leplus.nouvelobs.com/contribution/1395701-5-euros-d-amende-pour-les-parents-en-retard-a-la-creche-ca-ne-sera-pas-systematique.html

3. 아이들 보육에 더 많은 예산 투입

우리들은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설이용의 기회들과 적지 않은 보조금 등을 통해 최근 몇 년간 육아에 대한 큰 만족감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2013년 통계 가족정책과 관련한 국가 예산은 2천7백만 유로를 기록했다.

20세기의 시작, 2000년에는 영유아와 관련된 가족정책에 책정된 예산이 천 3백 4십만 유로에 불과했다. 이 때는 PAJE(영유아 보육지원국)가 존재하지 않았고, 지금처럼 발달된 보육원 정책 또한 시행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15년 정도 지난 지금 주간지 Les Echos의 조사에 따르면 2013년 아이들의 보육과 관련된 정책에 2천7백만 유로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이 비용의 4분의 3이 국가사회보장보험에 투입되었다.

하지만 국가의 사회보장보험이 예산의 증가를 가져왔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사회보장보험의 가족부문은 구조적으로 흑자 예산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소득에 의해 책정되는 사회보장보험의 총 납입금은 가족수당으로 지급되는 총 지원금 보다 더 많다.

Radins 2015년 7월 31일자
기사출처:http://news.radins.com/actualites/politique-familiale-une-facture-27-milliards-euros-par-an,13877.html

4. 여전히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어린이집 건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그의 임기 내에 십만명을 더 수용할 수 있는 보육원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예외적인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 약속은 지켜지기 힘들 것 같다. 그 이유는 프랑스에서의 보육원 건설비용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가정 상원 의회 HCF는 지난 목요일 만 3세 이하의 아이 보육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놀랄 것도 없는 결과이지만,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보육시설인 보육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만천3백명을 위한 자리가 2014년 새로 만들어졌다(2013년 만700자리 대비).

보육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재정지원에 비해 보육원 건설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육원에 한 명을 위한 자리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3만 유로가 든다. 60명을 수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2백만 유로가 더 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영국에서는 아이 한 명당 5제곱미터의 공간을 요구하지만 프랑스는 두 배의 공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모순된 상황에 놓여있다. 부모들은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보육원이 더 많아지기를 요구하지만, 지자체는 건설비용 때문에 이를 망설이고 있다.

라디오 채널 Europe 1 2015년 10월 1일자
기사출처:http://www.europe1.fr/societe/construire-des-creches-ca-coute-trop-cher-2512765

5. 아이를 돌보는 것,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골치 아픈 일

프랑스에서는 매년 80만 명의 아이가 태어난다. 프랑스는 아일랜드와 함께 유럽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는 나라이며 보살핌을 받아야 할 2천5백5십만 명의 0세에서 3세 아이들이 있다. 16%의 프랑스 영유아들이 보육원에 맡겨지지만 고르게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파리의 아이 10명 중에 4명이 보육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애슨시의 아이들은 20명 중 한 명만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는 예산의 문제로, 보육원 한 자리는 시에 3만4천유로의 비용을 발생시킨다.

세 명 중 한 명의 아이가 보모의 집에게 맡겨지고, 단지 2%의 가족만이 그들의 집에 보모를 불러 아이를 돌보게 한다. 하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육방식은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는 것이다. 10명 중 5명의 아이들이 아빠나 엄마의 보살핌 속에 집에 머무른다. 특히 엄마의 경우, 두 번째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일을 지속하는 비율이 65%를 넘지 않는다. 또한 만 2세부터 정규교육을 받는 아이의 비율이 2000년 3명 중 한 명이었지만, 2014년에는 12%로 크게 감소했다.

프랑스 방송 Francetvinfo 2015년 11월 8일자
기사출처:http://www.francetvinfo.fr/societe/education/faire-garder-son-enfant-un-vrai-casse-tete-en-france_1165845.html

6. 파리 : 비상시를 위한 어린이집에 만족하는 부모들

유모가 아픈 날은 아주 골치아픈 날이 된다.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아이를 맡기는 일을 해결 해주기 위해 파리 9구는 « 비상시를 위한 보육원 »이라는 실험적인 시도를 했다. 이러한 시도는 부모들에게 호평을 받았고 시 보육원, 부모들이 운영하는 보육원, 사설 보육원으로까지 그 참여를 불러일으켰다.

지난 일 년 동안 이미 백여 명이 넘는 부모들이 이를 이용하였다.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30세 남성은 이렇게 전한다. “저희는 유모가 아프게 되어 비상시 보육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시청 내 가족을 위한 정보제공부서에 문의하였더니 프로방스 거리에 있는 보육원과 연결 해주었고 그 다음날에는 드루오 거리에 있는 비상 탁아소를 갈 수 있었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한번쯤은 아이를 돌보는 사람들에게 급작스럽게 발생한 일 때문에 고민에 빠진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마지막 남은 대안마저 소용없을 때도 있습니다.”(파리 9구 구청장 델핀 뷔흐킬)

어떻게 운영되나?

10개월 이상에서 만 3세 미만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파리 9구 시청 내 가족을 위한 정보제공부서로 연락을 취하여 예약할 수 있다. 이곳에서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 지역 내 시설들을 찾아준다. 몇 시간에서부터 5일까지 이용 가능하며 일반 보육원과 동일한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프랑스 뉴스 사이트 Leparisien 2015년 11월 29일자
기사출처:http://www.leparisien.fr/paris-75/paris-75009/paris-les-parents-plebiscitent-les-places-de-secours-en-creche-29-11-2015-5323603.php#xtref=https%3A%2F%2Fwww.google.fr%2F/

교육 및 보육 비용

1. 어린이집, 육아보조를 비롯한 어린 아이들을 보살피는 데에 드는 비용

프랑스 한 가정이 유아기의 아이들을 보살피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보건부 소속 프랑스 연구평가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평균, 만 3세 미만의 아이 한 명 당, 월 411유로가 든다.

다행히도 가족수당이 이러한 부담을 54.5% 줄여준다. 현재 이들은 월 평균 137시간, 시간당 1.4유로로, 즉 187유로를 제 3자를 통한 육아에 지출하고 있다.

육아비용은 부모가 선택한 육아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어린이집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월 평균 153유로,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1.2유로를 부담한다. 이에 반해 육아보조를 쓸 경우 195유로, 시간당 1.4유로를 부담하게 된다. 보모를 들이게 되면 월 317유로, 시간당 2.7유로를 지불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3살 아이의 부모 중 2%에도 미치지 못한다.

보육원 이용 비용은 2007년에 비해 시간당 0.1센트 오르는 데 그쳤다. 6년간 6.1% 상승했을 뿐이다. 육아보조는 0.2%, 16.7% 상승했으며 최저 임금의 상승률보다 높았다고 연구평가통계청은 밝혔다.

프랑스 뉴스 사이트 Capital 2015년 8월 27일자
기사출처:http://www.capital.fr/a-la-une/actualites/creche-assistante-maternelle-ce-que-coute-la-garde-d-un-enfant-en-bas-age-1066408

2. 우리 아이의 보육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

아이를 집에서 돌보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다른 곳에 맡기는 것이 나은가?

아이들을 집이 아닌 곳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보육원, (임시)탁아소, 보모의 집 등 다양한 방식 중에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아 오히려 걱정이 생기게 된다.

아이를 집에서 돌보든 다른 곳에 맡기든 우리는 예산을 절감하고자 노력한다. 그런데 이 두 경우에 있어 비용을 환급받는 구조가 같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 아이를 집이 아닌 곳에 맡기는 경우, 세 가지 방식만이 유효하다.

- 보육원과 탁아소 (이 목적만으로만 운영되는 곳이어야 한다.)

- 정규교육 외 탁아소

- (공인된) 보모

이러한 경우 절반의 비용이 세금을 통해 환급된다. 이 때 최대 환급 금액은 아이 한 명 당 연간 1150유로이다. 만약 여러 곳에 아이를 맡긴다면 이 총액은 변함 없이 나누어져 환급된다.

집에서 아이를 돌볼 때도 원칙은 그대로이다. 가족 중 일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의 세금을 통해 비용이 환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는 가족수당지원국에 의해 한 해 최대 7500유로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이를 직접 돌봐야 하며 만 6세가 되기 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프랑스 뉴스 사이트 Boursorama 2015년 11월 16일자
기사출처:http://www.boursorama.com/actualites/les-frais-de-garde-de-mes-enfants-sont-ils-deductibles-8a304f6a7a9f7e9ca262fb1ea64784aa

육아지원 관련

1. 지원금 증액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

4월 8일 화요일, 정부는 가족 수당 지원금 개편에 대한 세부사항을 공개했다. 프랑스 국영방송 France2의 연구에 따르면 공공 보조금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8일 France2의 뉴스에서 인구통계학자 발레리 르후주는 가족 수당 지원금과 출산율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 아니오. 그 둘은 관계가 없습니다. » 그의 연구는 프랑스 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프랑스를 예로 들면 여자 한 명당 출산율은 1.99명이고 두번째 아이부터 지원금은 129유로로 증액된다. 독일의 경우 첫번째 아이에게 184유로, 두번째 아이에게 190유로가 지원되지만 여자 한 명당 출산율이 1.38로 유럽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인다. 룩셈부르크는 첫째 아이에게 185유로, 둘째 아이에게는 440유로가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역시 프랑스보다 낮은 출산율을 보인다. 프랑스는 육아 지원금이 가장 낮지만 출산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적 성취감과 모성사이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프랑스의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는 것이라 생각된다고 기자는 이야기 한다. 아이의 보육에 대한 지원금, 보육원의

수용능력과 3살부터 시작되는 국가로부터의 의무교육 등 다른 유럽국가들이 가지지 못한 조건들을 프랑스는 가지고 있다.

프랑스 육아 기사 전문 사이트 Magic Maman 2015년 4월 9일자
기사출처:http://www.magicmaman.com/,natalite-le-montant-des-allocations-n-a-aucune-influence,2554308.asp

2. 아이를 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맡길 때 지원받는 것들

시에서 운영하는 보육원을 이용할 때 부모들은 수입에 따른 보조금, 세금 감면 등의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가족수당지원국으로부터의 지원

다른 보육방식과는 달리 가족수당지원국은 보육원 비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주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소득에 따라 책정되는 생활비 지원금에 포함되어 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지원금에 대한 정보는 시청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2.세금

세금을 통해, 한 자녀 당 최대 2,300유로의 비용에 대해 50%를 공제 해준다. 이는 과세년도의 1월 1일 기준 만 6세 이하의 아이에 해당된다.

3. 불리한 점

보육원을 이용하는 것이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들지만, 보육원의 운영시간 때문에 시간의 유연성은 비효율적이다. 언제나 자리가 부족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자신이 원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보육시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예시

만 3살 이전의 자녀를 가진 부부가 보육원에 1년(11개월)의 운영기간 동안 주당 40시간 아이를 맡기게 되었다면 그들의 사전 계약한 시간은 1920시간이다. 그들이 최고소득계층에 속한다면 비용은 시간당 2.5유로로 계산된다. 이는 연 4800유로에 해당하며, 1150유로를 공제받으면 그들은 연간 3650유로(월 304유로)를 지불해야 한다.

프랑스 뉴스 사이트 Boursier 2015년 8월 13일자
기사출처:http://argent.boursier.com/quotidien/fiches-pratiques/garde-d-enfant-en-creche-le-detail-des-aides-401.html

일·가족 양립 정책

1. 부모가 일하는 시간에 따라 어린이집이 운영된다면?

근무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부모들에게 있어 아이들을 맡기는 것은 굉장히 골치아픈 일이다. 병원에 인접한 한 작은 보육원은 이러한 그들의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한다.

만약 직장에서 아이를 맡기는 것이 불가능한 시간에 업무를 지시한다거나, 매주 당신의 근무 시간이 바뀐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다돔 협회는 이르면 5년 내에 메이엔 시에 작은 보육원을 개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보육원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 4시 반에서 저녁 10시 반, 생 후 2개월부터 만 6세까지의 아이들 스무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책임자인 로젠 펠라뜨는 동시에 10명이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에다돔 협회의 목적은 부모들이 각자의 직업과 가정의 삶을 동시에 일궈나갈 수 있도록 기존 시설의 방식들을 보완하는 것이다. 협회는 메이엔에 앞서 이미 3개의 작은 보육원을 개원한 바 있다.

이 작은 보육원은 북 메이엔 의료센터에 인접한 곳에 위치할 것이며 의료센터 뿐 아니라 가족수당지원국과 시 의회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다. 이 보육원에는 5명의 공인된 보육 전문가들이 상주하게 된다.

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많은 부모들이 보육원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프랑스 뉴스 사이트 Ouest France 2015년 10월 26일자
기사출처:http://www.ouest-france.fr/quand-la-creche-suit-les-horaires-des-parents-3799207

기타

1. 아이에 대한 신체적 체벌: 비판받은 프랑스법

프랑스 법은 일반적으로 아동에 대한 폭력을 금지하고 있지만, 유럽 의회는 엉덩이 또는 따귀를 때리는 가벼운 형태의 체벌을 허용하는 프랑스 법의 결함을 비판했다.

파리의 경우, 이미 아이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아이의 존엄성을 해치고 심리적 발달을

저해 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나 태도를 금지하고 있다. 프랑스가 유럽위원회에 전달한 보고서에서, 정부는 분명히 «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몸을 존중할 권리가 있다»와 « 인간의 몸은 불가침 »이라는 가치를 추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를 명시한 민법 조항을 인용하였으며, 또한 형법에서 "15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일상적 폭력" (제 222-14)에 대한 중벌을 목록화한 자료를 인용하였다.

학교의 경우, « 1991 공문 »은 초등학교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중학교에서의 교육적 체벌은 "교육 공동체 모두에 의해 합의된 교육 방법의 일부로 행해져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프랑스 법원은 « 교정의 권리 »와 관련하여, 사회적 권리 유럽이사회(CEDS)의 의견에 따라 더 이상 이에 의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유럽 사회 헌장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임무를 지닌 이 위원회는, 프랑스 법이 이 조약을 존중한다는 내용의 보다 명시적인 금지법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런던에 본사를 둔 어린이 보호 시민단체 Approache는 이 문제에 민감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은 부모, 교사 혹은 제3자에게 « 교정의 권리 »를 여전히 부여하고 있다. Approache는 2003년 보모가 23개월의 아이를 때린 것이 교정의 권리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판결한 프랑스 법원의 판결을 인용했다. 이 시민단체는 정부의 공문이 어떠한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프랑스의 법 환경이 현실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가벼운 체벌에 대해 법원이 관용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을 묵인한다고 꼬집었다.

AFP 연합통신 2015년 3월 4일자
기사출처:http://www.gazette-sante-social.fr/17219/adoption-de-moins-en-moins-de-demandes-dagrements

2. 입양: 점점 줄고 있는 입양 승인요청

2013년 입양 승인요청이 전년대비 20% 감소했으며 승인비율은 18% 감소했다고 2015년 2월 4일 국가아동위험감찰기구에서(Oned)에서 밝혔다.

2012년 6,840건이었던 승인요청은 2013년에는 5,439건으로 줄었으며 4,344건의 입양이 승인되었다. 입양신청이 줄어든 것은 행정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입양을 결정하는 배우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더 많은 고민을 하기 때문이다. 이미 입양을 경험한 가정이 제공하는 현실적 정보들이 늘어나는 것 또한 입양신청을 줄이는 데에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국제입양의 경우 더욱 그렇다.

외무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 1,060명의 외국 아이들이 프랑스로 입양되었다. 불과 1년 전에는 1,343명이었다. 이러한 감소는 국제입양국가가 늘어나는 것에 제동을 건다.

2013년 12월 31일 기준, “국가의 피후견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아이들은 2,363명이었다. 이 때, 이 지위를 얻은 아이들 열 명중 네 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미 입양을 위한 가정에서 살고 있었다. 그들의 평균 나이는 만 7살 7개월이었다. 이들은 보통의 고아들 보다 훨씬 더 어린데, 그 이유는 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이 지위를 얻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피후견인들은 친족이 없거나 법적으로 버려진 아이들인데 2011년 이후 고아의 숫자는 224명, 피후견인의 9%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의 피후견인이 된 아이들의 숫자는 2000년 이후 큰 변동 없이 600명에서 700명이 조금 넘는 정도이다. 이 아이들은 아주 빠르게 그 지위를 벗어난 후 입양이 된다.

1,093명의 아이들이 2013년 국가의 피후견인 자격을 포기했다.(2012년 대비 5% 증가) 이들 중 70%에 가까운 아이들이 정식으로 법적 입양이 되었으며 15%는 그대로 남고, 13%는 부모에게로 돌아갔다.

AFP 연합통신 2015년 2월 4일자
기사출처:http://www.gazette-sante-social.fr/17219/adoption-de-moins-en-moins-de-demandes-dagrements

3. 대부분의 부모들 자신들이 이용하는 보육시설을 추천

현재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보육시설인 크레쉐(crèche)에 대한 만족도를 프랑스 보육시설 연합 FFEC와 프랑스 여론조사 마케팅 국제 사회 연구소가 발표했다.

98%의 부모가 그들의 자녀가 행복하다고 답했고 96%의 부모가 자신들이 이용하는 보육시설을 다른 부모에게 추천하고 싶다고 답했다.

대다수의 부모글이 그들의 직업적인 삶과 가정적인 삶 모두에 보육시설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린이집 운영시간, 특별활동, 놀이, 시설, 안전 등 모든 면에서 가족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크레쉐에서 근무하는 이들의 친절함과 전문성에 만족한다는 의견도 우세했다 (25%의 부모가 완벽하다고 답했다). 지난 프랑스 연구평가통계청에 따르면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2013년 말 39만6천 명이 수용 가능했는데 이것은 2012년보다 9000 자리가 증가한 것이다. 이는 가족들에게 좋은 소식일 것이다.

프랑스 교육 기사 사이트 Parents 2015년 9월 4일자
기사출처:http://www.parents.fr/Actualites/96-des-parents-recommanderaient-leur-creche-2180027

독일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및 정책

1. 영유아교육의 중요성

독일의 교육학자 볼프강 티트제(Wolfgang Tietze)는 독일 내 유아교육정책은 아직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한다.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베를린자유대학교의(Freie Universitaet Berlin) 교수이기도 한 그는 잘란트 주에(Saarland)에 있는 키르켈(Kirkel)시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유아교육정책은 아이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티트제는 또한 “누벡” (Nubbek)이라고 불리우는 “영유아기 교육에 관한 국가적 차원으로서의 연구회” 라는 연구단체의 고문역할을 맡고 있다.

이 단체는 2012년에 출범하였고 유아교육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모여 만든 독일 단체이다. 이 뿐 아니라 티트제 교수는 패트퀴스(Paedquis Research Institute)라는 연구기관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이 기관은 유아교육 정책에 대한 조사와 개발을 주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제 사회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실용적이며 실증적인 정책 조사와 연구를 중시하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독일 유치원의 수는 급속하게 증가한 반면 유치원의 질은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는 보고이다.

티트제 교수는 “요즘 독일 유치원의 평균적인 수준은 보통이라고 보면 된다. 유치원의 수는 급격히 증가했지만 좋은 유치원은 찾기 어렵다는 뜻이다.” 라고 말했다.

유아교육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유치원이 좋은 교육을 제공하면 적정나이가 되어(만 6세) 학교에 입학해 정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독일 아이들이 늘어날 것이고, 학교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유급을 하는 아이들도 줄일 수 있다.

티트제는 이러한 유아교육정책의 질을 높이는 일환으로 아이들의 부모 역시 이 고민을 함께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이의 교육에 관심을 갖는 것은 가정의 화목한 분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며 이는 더 많은 부모들이, 가족 상담참여 등의 가족활동을 할 것이라는 이론이다.

독일에 살고있는 수많은 이민가정 아이들 역시, 부모들의 활발한 유아교육 참여로 이들이 독일 사회와 문화에 통합되는 데에 긍정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티트제는 개개인 나아가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유아교육 정책이 지속적으로 유아교육의 질을 좋게 관리하기 위해 유치원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철저한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독일 일간지 Süddeutsche Zeitung 2015년 2월 5일자
기사출처:http://www.saarbruecker-zeitung.de/saarland/homburg/kirkel/kirkel/Kirkel-Kindergaerten-Kindertagesstaetten-Paedagogen-und-Erziehungswissenschaftler-Paedagogik-Schulanfang-Schulbildung-Vorschulpaedagogik;art446983,5615088

2. 쇼이블레 보육 지원비를 유치원에 지출하지 않을 계획

연방정부재무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결되어 지출이 정지된 보육 지원비 (BG)로 인해 남게 되는 재정을 유치원이나 추가적 가족 정책에 투자할 계획이 없다고 하였다.

참고: 가정내 보육시 보육지원비 (Betreuungsgeld: 베트로이웅스겔트 - 이하 BG)

쥐드도이췌 자이퉁에 의하면 동결된 10억 유로에 상하는 보육 지원비는 부모수당 (Elterngeld: 엘터른 겔드 - Parental Allowance)이 제 때 계획대로 지불되는데 쓰일 예정이라 한다. 국회 정부 비서관인 엔스 슈판(Jens Spahn: CDU)는 지난 화요일 남은 돈은 “계획 외의 재정지출“ 즉 부모수당이나 실업수당 등에서 나는 재정부담을 덜 계획이라 한다.

즉 2016년 재정 계획에서 재정지출이 정지된 보육 지원비(BG)를 각 주 정부에 유치원을 위해 쓸 것을 거절한 것이다. 동결된 BG는 가족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과 가족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가족부 장관은 강조한다.

쇼이블레의 발언에 반발하는 바이어른 주, CSU 정당 대표 제호퍼는 BG가 정지됨으로써 남는 돈을 주정부에서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며, 바이어른 주 정부 사회부장관인 에밀리아 뮐러(Emilia Müller)는 BG는 유치원에 쓰여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육 지원비 BG는 2018년에 종결된다. 이로 인해 내년에는 3억9천(390,000,000) 유로에 상당하는 돈이 남으며, 매해 10억 가까이 모아질 것이다. 쇼이블레는 그러나 이 남은 재정이 지금까지 메꿔지지 못한 부모수당과 실업수당을 충당하는데 모두 쓰일 것이라고 하였다.

부모수당의 수혜자들은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점점 많은 아버지들이 육아휴직을 하기 때문이다. 2018년에는 58억 유로에 상당하는 부모수당 재정지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8억 유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1억 3천 유로를 매해 자녀가 있는 가족 계획 외 실업수당금을 재정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지금까지는 보육지원비 (BG)가 실업수당과 맞물려 지급되었다. 보육지원비가 없어지면, 그 차이를 메꿔야 하는 것이다.

재무정책 대변인인 에크하르트 레베르그 (Eckhardt Rehberg)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각하기 이전에 기존의 법적 정책인 부모수당이 제대로 재정적 운영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앞으로 3년 동안 추가적으로 10억 이상이 부모수당에 지출 될 것이며, 남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였다.

독일 일간지 Süddeutsche Zeitung 2015년 9월 1일자
기사출처:http://www.sueddeutsche.de/politik/familienpolitik-schaeuble-will-betreuungsgeld-nicht-fuer-kitas-ausgeben-1.2630157

교육·보육 비용

1. 가정내 보육 지원비: 누가 이용하고, 얼마인가?

참고: 가정내 보육시 보육지원비 (Betreuungsgeld: 베트로이웅스겔트 - 이하 BG)

논쟁이 되고 있는 BG는 이미 2년 동안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뒤엎었다.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또 얼마 동안 BG 지원을 받았을까? 숫자로 정리해 본다.

BG를 반대하는 자들은 BG를 부엌 프리미엄 또는 가정주부 월급이라며 비아냥거렸다. 반대자들은 CSU 정당이 전통적 성 역할을 강조하며 전근대적 가족형태를 옹호한다고 비난하였다. 여자들이 집에 있으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에 대해 보상을 준다는 것이다. 그 반면 CSU 입장에서는 사회에 기여하는 일을 하는 것이므로 한 달에 150유로를 받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주정부에 의한 BG의 재정적 지원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지만, CSU정당 대표인 호르스트 제호퍼 (Horst Seehofer)는 바이어른 주에서 계속 시행할 것이라 강조한다.

제호퍼의 이런 반항적인 행동은 놀라운 것이 아닌데, 바로 바이어른 주에서 가정내 보육 지원비 청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이 지역에서 2015년 상반기(1-3월까지)에 97,301명의 어머니들과 3,089명의 아버지들이 지원을 받았다. 지역비교에서 바이어른 주는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SPD(사회민주정당)가 이끄는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Northrhein-Westfalen) 주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부모들이 이 정책의 지원을 받았다.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는 바이어른에

비해 현저히 많은 아버지들이 지원을 받았다. 당연히 인구밀도가 높은 주정부들이 높은 순위에 있다. 출생률을 감안해 본다면 바덴 뷰르템베르그 (Baden-Württmberg)주와 바이어른주가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낸다. 2015년 상반기 지원의 대상인 즉, 2012년 8월에서 2014년 1월까지 출생한 60% 이상의 아동들이 BG지원을 받았다.

2013년 8월 도입된 BG지원을 받은 자녀들의 부모는 지금까지 455,277명에 달한다. 처음에는 수요가 그리 높지 않아서 2014년 상반기에는 145,769명의 부모들이 지원을 받았다. 지원을 받은 수혜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는 그 전에 존재했던 수혜자들이 계속 존재하면서 새로 수혜를 받는 부모들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BG가 도입된 2년 후인 올 해 8월에 처음으로 혜택에서 제외 되는 자녀 연령대 즉 통계에서 제외되는 그룹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연방정부 가족부에 의하면 2013년 8월에서 12월까지 5천5백만(55,000,000) 유로를 BG 재정으로 책정했었고, 1천6백 9십만(16,900,000) 유로가 사용되었으며, 2014년에는 5억1천 5백만(515,000,000) 유로가 책정되었고, 4억3백만(403,000,000) 유로가 쓰였다. 2015년에는 10억(1,000,000,000) 유로가 계획되었다가 9억(900,000,000) 유로로 축소 책정되었다.

눈에 띄는 것은 보육 지원비의 수혜 기간이 상당히 길다는 것으로, 약 19.7개월에 달한다. 동독의 경우는 평균 15.5개월로, 평균 20개월 동안 BG지원을 받은 서독에 비해 현저히 짧다. 자녀의 나이가 15개월에서 36개월이며 집에서 보육할 경우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민가정이 BG로 불이익을 받을 수 도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사실 전체 455,321명의 수혜자 중 79,520명 즉 17%가 부모 둘 다 외국인인 경우였다. 이와 같은 비율이 2013년 출생한 아동들 중 본인 또는 부모 둘 다 독일 여권 소지자가 아닌 경우였다. 그러나 이 사실만으로 이민자들이 BG 수혜를 더 많이 받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따라서 BG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더 많이 청구되고 수혜를 받았는지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 청소년 연구소 (Der Deutsche Jugend Institut)는 지난 달 처음으로 BG 수혜를 받은 부모들을 상대로 설문조사에 들어갔다. 연구소는 이번 가을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독일 잡지 Spiegel 2015년 7월 21일자
기사출처:http://www.spiegel.de/politik/deutschland/betreuungsgeld-ein-ueberblick-in-zahlen-a-1044594.html

육아지원 관련

1. 육아보조금 정책이 육아정책을 망치고 있는 실정

독일연방정부는 2013년 “Betreuungsgeld(BG)”라는 육아보조금정책을 만들었다. 이는 3세 이하의 자녀를 어린이집으로 보내지 않는 부모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해주는 정책을 말한다. 그러나 이 정책은 부모들의 육아를 돕자는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실제로 상당수의 이주가정이나 사회소외계층 가정이 자녀들을 어린이집으로 보내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독일청년협회와(the German Institute for Youth : Deutsches Jugendinstituts) 독일 도르트문트 대학교는(University of Dortmund) 3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10만 명 이상의 부모를 대상으로 이와 같은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이 육아보조금 정책이 사회소외계층 가정으로 하여금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육아교육정책 외 다양한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한다. 연구는 또한 독일의 보수자유주의 정당인 기독교사회당이(CSU: Christlich-Soziale Union) 육아보조금 정책을 제안하고 통과시키기까지 큰 영향을 행세했다고 한다.

2013년 8월 이후로 15개월에서 3세 이하의 자녀들을 어린이집으로 보낼 의향이 없거나 또는 가정교사를 집으로 초대하지 않은 부모들은 한 달에 100유로를 육아보조금으로 받았다. 2015년 8월부터는 보조금이 150유로로 인상된다.

한편,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나 전문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부모이며 자녀들을 어린이집으로 보내지 않은 부모들 중 54%가 자녀들을 어린이집으로 보내지 않는다. 자료에 따르면, 전문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부모들 또는 독일 교육체계상 가장 낮은 수준의 학교를(Hauptschule) 졸업한 부모들은 100유로의 보조금을 타기 위해 역으로 자녀들을 일부러 어린이집으로 보내지 않는다.

비교적 상급 수준의 학교인 레알슐레를(Realschule)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했으며 자녀를 어린이집으로 보내지 않은 부모들 중 14%는 보조금 정책이 일부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들을 어린이집으로 보내지 않게 만들었다고 동의했다. 대졸출신 학력에 마찬가지로 자녀를 어린이집으로 보내지 않은 부모들 중 겨우 8%만이 보조금을 타기 위해 아이를 어린이집으로 보내지 않는다.

Huffington Post, Germany 2014년 7월 27일자
기사출처:http://www.huffingtonpost.de/2014/07/27/betreuungsgeld-bildung-erziehung_n_5624247.html

2. 독일에서는 육아와 커리어를 병행할 수 없어

독일 여성들은 직장과 육아와 병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화요일 발표된 토마스-로이터 재단과 록펠러 재단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독일 여성이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 위한 사회적 구조가 잘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설문에 참여한 전세계에 분포한9500명의 여성들 중 47%가 가족 설립이 자신의 경력에 손상이 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반면 독일은 21%만이 그렇다고 답했다.(일본의 경우 17%) 이 설문 조사는 G20에 소속된 20개 국가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었다.

이 조사에 의하면 개발도상국 여성들이 특히 해당 항목에 낙관적이었다. 브라질의 경우 74% 여성들이 직업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준 국가는 인도네시아와 남아공 (63%)이다. 미국의 경우 43%로 중간지점이며 프랑스는 34%, 그리고 영국은 29%이다.

세계은행 전문가인 헨리에떼 콜브(Henriette Kolb)씨는 해당항목에서 높은 지수를 나타내는 국가들은 육아를 가족이나 친척들이 함께 하는 문화이거나, 비교적 낮은 보수로도 도우미 (보모)를 고용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일 것이라 말한다.

그와 달리 독일에서는 유치원과 종일학교 (*보통 독일학교는 12시쯤 수업이 끝남)의 부족 등으로 여성들이 직장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

독일의 여성들이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휴직시간이 길고, 휴직 후에도 주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인데 이는 여성들이 경력을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 외에도 46%의 여성들이 남성이 여성보다 구직활동이 훨씬 수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1% 의 여성들만이 자신의 임금에 긍정적인 입장이였다. 또한 1/5의 여성들만이 남성들과 비교해 평등한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며, 64%의 여성들은 평등한 임금을 받는 것이 취업여성들에게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G-20 국가 중 캐나다에 이어 두번째로 가장 많은 취업여성 비율을 보유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 신문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2015년 10월 13일자
기사출처:http://www.faz.net/aktuell/wirtschaft/menschen-wirtschaft/in-deutschland-sind-kind-und-karriere-kaum-vereinbar-13854493.html

기타

1. 형제서열관계 연구

한 사람의 인성은 형제 서열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음이 밝혀졌다. 이 연구에 참여한 라이프치히 대학의 심리학자 율리아 로러(Julia Rohrer)씨는 형제서열에 따라 지능에 대한 미세한 차이점이 있음을 보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첫째가 다른 형제들보다 지능면에서 미세하게 조금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는 것이다.

형제 서열이 성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은 미국의 심리학자 프랑크 설로웨이 (Frank Sulloway) 에 의해 1996년 출간된 "Born to Rebel"이라는 책에서 유래한다. 그에 의하면 첫째는 완벽주의적이고, 둘째는 사회적이며 그리고 막내는 반항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 참여한 로러씨는 이 이론은 학계에서 여전히 논쟁적이라고 주장한다.

라이프치와 마인츠 대학교 주도하에 진행된 이번 연구에서는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독일 출신의 약 2만명의 인원이 참여했으며, 연구데이터를 분석해 형제간의 서열이 삶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해 조사했다. 이는 19세기에서부터 여러 연구자들이 던진 질문이며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은 여러모로 모순이 많았다. 특히 연구결과는 연구 통계 및 결과 분석에 따라 크게 좌우되었다.

이런 오류를 없애기 위해, 해당 연구팀은 각 가족당 한 자녀에 대한 질문만이 아닌, 자녀수가 같은 가족간의 데이터 또한 비교했다. 결과는 성격의 기본 요소인 외향성, 정서적 안정성, 융화성, 그리고 신중형(conscientiousness)면에서 어떠한 것도 출생 순위에 따른 상관관계가 없었다.

슈테른(Stern) 2015년 10월 19일자/ 슈피겔(Der Spiegel) 2015년 10월 20일자

슈피겔:
http://www.spiegel.de/wissenschaft/mensch/persoenlichkeit-nicht-von-reihenfolge-der-geburten-bestimmt-a-1058541.html

슈테른:
http://www.stern.de/familie/kinder/geschwister---bestimmt-die-rangfolge-den-charakter---6508286.html

2. "부모들의 기회는 어린이들의 기회" 주정부 프로그램의 최종 평가 보고서

약 6000명에 이르는 가족관련 전문인력들이 "부모들의 기회는 어린이들의 기회"라는 주정부 프로그램 (2011-2014)에서 부모지원자 (Elternbegleiter)로서의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부모지원자들은 부모들을 자녀 육아와 교육문제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독일청소년 연구소(DJI)와 에어랑엔 뉘른베르크 대학교(FAU)가 함께 연구 조사한 최종 평가 보고서가 발표 되었다.

전문가들과 부모들이 프로그램의 여러 방면에서 혜택을 받은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그들의 능력을 좀 더 강화하고 또 실전에 가까운 지식을 얻는 효과가 있었고, 부모들은 부모지원자들과의 공동작업이 존중 받는 분위기에서 이루어 졌고 또 교육과정에서 혜택을 받았다고 평가 하였다.

성공적인 부모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 공간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기본 전제라는 것과 가족관련 교육분야의 전문가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이수가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평가 보고서는 독일 청소년 연구소의 사비네 발퍼(Sabine Walper) 교수와 에어랑엔-뉘른베르크 대학교의 마크 스탬러(Mark Stemmler) 교수의 지휘하에 여러 연구원들의 조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2011년에서 2014년까지의 부모지원 프로그램의 실전 진행과 영향을 조사하였다.

보고서 출처:
http://www.elternchance.de/aktuelles/abschlussbericht-zur-evaluation-des-bundesprogramms-elternchance-ist-kinderchance-erschienen/

스웨덴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및 정책

1. 비독성 (nontoxic) 유치원을 향한 한 걸음

비독성 유치원을 위한 두 가지 요령: 아이들이 자리에 없을 때 청소하라. 오래 된 플라스틱 장난감을 교체하라.

스웨덴 곳곳에서 많은 근로자, 이익집단, 그리고 정치인들이 유치원을 더 유독한 장소로 만들고 있다. 이에 많은 자치단체들은 정책을 입안했고, 일부는 많은 진전을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봄 비독성 유치원을 위한 새로운 조달 기준을 제정했는데, 이는 자치단체들이 그러한 목표를 더 쉽게 달성하도록 도울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조달 기준은 조달법령을 따르고 있다. 또한 선택사항으로 제시된 요건은 조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다.

스웨덴 조달청의 안네 라게르크비스트는 “만약 여러 자치단체들이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는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공급자들에게도 이로울 것이다” 라고 말한다.

유해화학물질안전원은 비독성 환경 구성을 담당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아이들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아이들이 성인에 비해 독성 물질에 더 민감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체구가 작고,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아이들은 그들의 일상생활 중 많은 부분을 유치원에서 보낸다. 따라서 건강한 유치원 환경은 매우 중요하다.

안네 라게르크비스트는 “당국은 법령을 통해 환경적으로 위험하고 유해한 물질들을 제거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조달 과정에서 환경과 건강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법률제정보다도 훨씬 빠르게 유해 물질을 제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교사들의 물건 구매를 지원하는 유치원 직원들도 매우 중요한 인물이며, 그들을 위한 인터넷 트레이닝이 6월부터 준비되어 있다. 트레이닝은 다양한 원료 및 그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유치원 직원들이 직접적인 구매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전문적 지식을 쌓고, 교사들과 함께하며, 유용한 분석을 하는데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유치원 직원들이 판매자에게 주문을 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그들이 어떠한 상품들이 규제를 따르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많은 유치원들이 활동재료나 재활용품 등을 기증받는다. 그러나 오래 된 전자제품과 같은 물건들은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물건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오래된 플라스틱 제품들도 마찬가지이다. 화학물질에 관한 강화된 규정을 통과한 최근에 생산된 장난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규제가 느슨했던 시절에 생산된 것이므로, 유치원에서 오래된 제품을 기증받을 경우 그러한 부분에 대해 먼저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거래 위원회 이외에도 비독성 유치원 환경을 위해 일하는 활동주체들이 있다. 환경보호연합은 2013년에 "비독성 유치원 사업"을 시작하여 유해한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원료와 상품들에 대한 종합목록을 작성하였다. 그들은 많은 도구들이 비독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환경보호연합의 대표인 울리카 달은 "지방자치단체의 크기, 혹은 공립/사립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발도르프 유치원은 이례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발도르프 유치원이 대부분 천연제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초안이 작성되었고, 1년 후 후속조치가 뒤따랐다.

울리카 달은 "서베이에 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1/3이 행동을 개시하였다. 활동들은 매우 다양하고 행정적 절차가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이는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라고 말한다.

이미 다수의 대규모 지방자치단체들이 행동을 개시하였기에, 60%에 이르는 공립유치원들이 이미 이러한 변화에 참여하고 있다. 울리카 달은 공정거래 위원회가 제시한 새로운 규정은 매우 중요한 발걸음이 되었다고 믿는다. 그 규정이 즉각적으로 전 생산라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녀는 "우리는 당국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을때에 행동을 개시하였다. 정치인들은 이제서 움직이기 시작하지만, 이는 또한 일부가 우리가 해 온 것들과 중복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원자재와 그 위험성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해, 유치원에서 환경보호연합의 (목록에 기재된) 원료들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문건은 매우 이해하기 쉽고 공개되어 있다. 이는 사용하기에 좋은 간단한 13개의 포인트 리스트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는데는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말한다. 권장사항의 예를 들자면 "80년대부터 사용했던 오래된 플라스틱 제품들을 제거라하" "음식을 위해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할 경우 (특히 뜨거운 음식의 경우) 어떻게 이를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라"와 같은 것들이다.

해화학물질 안전원의 비독성 유치원 사업을 함께하는 안나 닐란데르는 요구사항들에 대한 종합적 패키지가 매우 유용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유치원 직원들을 위한 가이드가 사업자들과 어떻게 거래하는지에 대한 실제적 조언을 포함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그녀는 “우리가 시장의 장난감에 대한 감시/감독을 하는 오늘이 매우 중요한 재출발점이 될 것이며, 실제로 장난감들이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난감들은 이렇게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더 이상의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진짜 문제는 아동을 둘러싼 모든 것들에 존재한다”라고 말한다. 안나 닐란데르는 다른 고려사항들도 제시한다. 청소를 해야 한다면 아동이 자리에 없을 때 하기, 바깥활동을 많이 하기, 고품질 장난감을 구매하기, 아동이 연령에 맞도록 고안된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도록 지도하기 등이다. 이러한 사항들은 특히 어린 연령의 아이들에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적극적인 행동주체는 스완이다. 스완은 상품과 서비스를 친환경 기준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데, 여기에는 유치원에서 쓰이는 장난감, 기저귀, 물수건, 그리고 가구와 같은 물건들을 포함하고 있다. 심지어는 바닥재, 페인트, 청소용역, 그리고 심지어 유치원 전체와 같은 건축물에도 이를 적용하고 있다. 스완의 커뮤니케이션 부서장 세실리아 빌헬름손은 “우리 상품을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은 사용자들이 스스로 관련지식을 쌓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미 필요한 일들을 해 두었고, 계속해서 상품들을 확인하고 있다” 고 말한다.

스웨덴 일간지 Lararnasnyheter 2015년 9월 11일자
기사출처:http://www.lararnasnyheter.se/forskolan/2015/09/11/steg-narmare-giftfri-forskola

교육·보육 비용

1. 금일부터 보육료 상한선 인상

다수의 자치단체가 2015년 7월 1일부터 취학 전 교육기관에 지불해야 하는 보육료의 상한선을 인상한다. 이번 인상은 의회의 의결에 따른 것으로, 소득비례지불 상한선을 월 40,000크로나에서 월 42,890크로나로 인상했다 (한화 600만원 선에서 640만원 선으로 인상)역주1. 차후에, 소득비례지불 상한선은 교육부에 의해 지표화 될 것이다. 스톡홀름의 교외 지역인 후딩리딩고, 얘팰라, 뱀되와 같은 많은 수의 자치단체가 보육료를 인상했다. 시 중심부에서도 보육료는 인상 되었는데, 이는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각 가정에서 지불하게되는 최대 보육료는, 첫째의 경우 월 1,260크로나에서 1,287크로나로 인상되었다 (한화 18만 9천원 선에서 19만 3천원 선). 둘째 아이 부터는 840크로나에서 858크

로나로 인상되었다 (한화 12만 6천원 선에서 12만 9천원 선).

역주1. 보육료는 소득에 비례하여 산정되어 더 높은 소득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보육료를 지불해야 한다. 다만 소득에 따른 보육료 증가에는 상한선이 존재하여 기존에는 월 40,000 크로나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의 보육료는 동일하였는데 이 상한선을 월 42,890 크로나로 인상한 것임.

스웨덴 뉴스사이트 Dagens Nyheter (DN) 2015년 7월 1일자
기사출처:http://www.dn.se/arkiv/stockholm/hojd-maxtaxa-fran-i-dag

일·가족 양립 정책

1. 아빠를 집에 있게 하라!

양육휴가를 사용하는 부모는 둘 모두 경력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댓가를 치르게 된다. 그러나 아버지가 더 큰 댓가를 치른다. 금주에 노동시장 및 교육정책 평가 연구원(IFAU)이 발표한 보고서에 나타난 패턴은 새롭지 않다. 성별 간 급료격차는 천천히 줄어들고 있으며, 마찬가지 패턴이 그에 따른 효과 - 연구자들이 "유리 천장(glass ceiling)"이라 부르는 -에서도 나타난다. 즉, 여성들이 남성들의 임금을 약소하게 따라잡았으나, 완전히 따라잡은 것은 아니다. 즉 급격한 변화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은 성별 간 (급여)격차의 큰 부분이 바로 부부가 자녀를 갖게 되면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급여 격차는 첫 자녀가 태어나면서 늘어나게 된다. 노동시장 및 교육정책 평가 연구원(IFAU)은 부모가 양육휴가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제시한다(역주1).

그렇다면, 부모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양육휴가와 경력개발 간의 균형을 맞추어 나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 그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서 덜 알려진 사실 하나는 소위 "아버지 리베이트(father rebate)"라고 불리우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 모두 양육보험(parental insurance) 기간 이후에 임금인상이 둔화된다. 그들이 집에서 지냈던 기간들이 차후 임금협상이나 진급심사를 할 때에 재등장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효과는 아버지에게서 더 크게 나타난다. 양육휴가는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에게 더 큰 경제적 손실이 된다. 이는 노동시장 및 교육정책 평가 연구원(IFAU)의 보고서에 나타나 있다.

부성휴가가 모성휴가보다 경력에 더 큰 손실이 된다는 점은 불공평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두가지로 해석 가능하다. 하나는 여성들이 더 긴 기간의 모성휴가 혹은 자녀병가를(역주2) 사용할 것이라 가정하여 처음부터 그들의 급여가 적게 산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녀가 태어나

면서 발생하는 손실도 더 적은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고용주들이 여성들의 공백보다 남성들의 공백에 대해 덜 관대하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한 가지 경우는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임금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 경우는 (양육)휴가를 선택하는 아버지들도 그와 같이 임금에서 차별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위의 두 가지 설명 중 무엇이 맞든지 간에, 결국 그 결과로 부모들은 자의에 따라 삶을 꾸려 나가기 힘들어 진다. 통계는 남성과 여성이 다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역주3). 이러한 패턴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패턴을 바꾸려면 댓가를 치러야 한다.

이러한 패턴을 바꾸려 하지 않고, 대신 지금껏 흘러온 흐름을 따른다는 것은 가치있는 무엇인가를 잃게 됨을 뜻한다. 이는 여성들에겐 더 성공적인 경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남성들에겐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 반드시 부모들이 그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양육보험(parental insurance)에 성불평등을 보상/개선하는 요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난 주, 스웨덴 노동자 조합(TCO)은 본지의 토론란에 기고한 기사에서, 지난 집권당에서 도입했던 성평등 보너스(역주4)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계산법을 현저히 바꾸었음을 보였다.

역주1: 스웨덴 부모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총 480일의 양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단 그 중 60일은 의무적으로 아버지가, 또 60일은 의무적으로 어머니가 사용해야 하며 나머지 기간은 누가 사용할지를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12년 통계는 평균적으로 아버지가 사용하는 양육휴가는 전체기간의 24%라는 것을 보여준다(참조: https://sweden.se/quickfact/parental-leave/). 기사 본문의 "다르게 사용"한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배분해서 사용하는 기간을 반분하지 않고 여성이 더 길게 사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역주2: 자녀가 아플 때 부모가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

역주3: 역주1에서와 같이 남성은 양육휴가를 짧게 쓰고, 여성은 길게 쓰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

역주4: 남성이 배타적으로 보장된 60일간의 양육휴가보다 더 많은 일수를 사용할 경우, 하루에 50크로나(대략 한화 7천 5백원선)를 보너스로 지급하는 제도 (참조:https://www.forsakringskassan.se/wps/portal/privatpers/foralder/barnet_fott/foraldrapenning/om_foraldrapenning). 이 보너스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3,500크로나(대략 한화 2백만원 선)이며, 쌍둥이일 경우 최대 18,000크로나(대략 한화 270만원)임.

스웨덴 뉴스사이트 Dagens Nyheter (DN) 2015년 3월 21일자
기사출처:http://www.dn.se/ledare/huvudledare/lat-pappa-vara-hemma/

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

1. 유치원에 목적을 수반하지 않은 자유놀이가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드러나

유치원에서의 교육활동이 커리큘럼의 전반적 목표로부터 시작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스웨덴 학교 시찰단의 최근 보고에 의하면, 교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수반하지 않은 자유놀이가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학교 시찰단은, 교육의 질적인 측면을 점검한다는 목표 하에, 20개의 유치원을 방문하였다. 이 보고에 의하면, 대체로 많은 부분들이 잘 시행되어지고 있는 반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었다.

긍정적인 부분들 중 하나는 교사들이 원아들에게 안전하고 지지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아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다양한 것들을 탐구하고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접근법과 실습법이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교수법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충분할 정도로 개별화 된 경우는 드물었다. 하나의 예로, 이미 글을 읽을 수 있는 원아들도 다른 원아들과 함께 기본적인 알파벳 연습을 해야만 했다. 그 대안으로 그러한 원아들은 반드시 다른 종류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대안적 활동은 보통 자유놀이이다.

놀이는 유치원 교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는 정책이 의도하는 바와 전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학교 시찰단은 자유놀이가 많은 경우 교육적 목표와 연결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다. 스웨덴 학교 시찰단은 교사들이 원아들의 자유놀이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원아들을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학교 시찰단은 유치원의 가이드라인이 더 명확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커리큘럼의 개정도 곧 이루어질 것이다. 정부는 유치원 과정을 의무화 하기를 원하고 있고, 스웨덴 교육청에 유치원의 커리큘럼을 더 명확히 할 것을 지시했다. 현 정부 야당은 유치원을 10년 의무교육의 첫 번째 해로 전환시킴으로써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다.

스웨덴 일간지 Lararnasnyheter 2015년 5월 5일자
기사출처:http://www.lararnasnyheter.se/lararnas-tidning/2015/05/05/mycket-lek-utan-mal-forskoleklass

2. 취학전 교육기관의 그룹별 과다 인원이 아동의 학습을 방해

예테보리 대학의 연구는, 취학전 교육기관에서 그룹별 아동의 수가 많은 경우, 교사들이 커리큘럼에 명시된 테마활동이나 접근법을 생략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룹별 아동의 수가 많은 경우, 기술활동, 과학활동 그리고 창의활동과 같은 테마활동이나 접근법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 연구는 46개 지방자치단체 산하 700명의 취학전 교육기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그리고 12개 취학전 교육기관의 24명의 교사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취학전 교육기관의 교사들은, 커리큘럼에서 각 아동이 그들의 학습과 발달을 위해 개별화된 도전적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고 있지만, 그룹별 과다 인원은 그러한 목표 수행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부 산하 취학전 교육기관의 경우, 평균 그룹별 아동수는 17명에 육박하였다. 18%의 그룹은 20명을 넘어섰고, 이러한 과밀화된 집단의 비율은 최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최근 교육부에 과제를 부여하여, 취학전 교육기관과 관련하여 아동의 그룹별 사이즈를 점검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러한 점검을 통해, 그룹별 아동수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롭고 제약없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도록 하였다. 교원조합은 이러한 움직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그룹별 평균 아동수의 상한선이 15명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유치원의 날에 교원조합에서 실시한 조합원 설문조사에 의하면 과밀화된 집단은 취학전 교육기관 교사들의 일상적 업무 수행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었다. 그 이외의 주요 장애물로는 학습 활동과 관련이 없는 업무들이나 충분한 준비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업무들을 꼽았다.

또한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요구는 상당히 높은 반면에, 오직 2%의 교사만이 특수교사가 교실에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25%의 교사들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 있을 경우 추가 지원을 받았다고 하였으나, 그러한 지원도 보모나 (특수)교육을 받지 않은 도움인력의 형태로 국한되었다. 특수 교육을 받은 전문가에서 받는 지원의 경우에도 대체로 상담의 형태로 국한되어 있다고 한다.

스웨덴 일간지 Lararnasnyheter 2015년 5월 21일자
기사출처:http://www.lararnasnyheter.se/lararnas-tidning/2015/05/21/stora-barngrupper-hinder-larande-forskolan

3. 유치원 반별 최다 허용인원 폐지

스톡홀름시는 사립 유치원의 반별 최다 허용인원에 관한 규제를 폐지하려고 한다. 스톡홀름 시의회 상임의원인 야당출신의 로타 에드홀름은 그러한 조치가 매우 불행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한다.

오늘 저녁, 스톡홀름 시의회의 교육 위원회는 사립 유치원 규정에 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수용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현재의 가이드라인에는 “스톡홀름시 규정에 따르면, 만 1-3세 유아반은 그룹별 인원수가 14명을 초과할 수 없고 만 4-5세 유아반은 그룹별 인원수가 18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은 새로운 가이드라인에서 삭제되었다.

로타 에드홀름은 “스톡홀름시 아동의 3분의 1 이상이 사립 유치원에 등원하고 있다. 그 아동들 역시 공립 유치원 아동들처럼 합리적인 수준의 반별 아동 수를 유지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한다.

스톡홀름시 교육청은 유치원의 반별 인원수나 정교사 비율, 그리고 아동별 교직원 수에 대한 규정들은 그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다고 말한다.

관련 부처의 관료들은 사립 유치원의 원장이 행정법원에서 승소했던 사례를 예로 들고 있다. 스톡홀름시는 위반 시 벌금 부과를 전제로, 유치원 교직원 중 33% 이상을 정교사로 채용해야 함을 의무화 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감독기관인 스톡홀름 시가 그러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것은 확실히 하면서도, 원장이 특정 비율 이상의 정교사를 채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 근거는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로타 에드홀름은 “우리는 항상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가이드라인에는 우리의 열망이 담겨있다.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반별 인원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녀에 따르면, 사립 유치원들의 반별 아동수도 일반적으로 큰 수준은 아니다.

로타 에드홀름은 “그러나 규정을 타이트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반별 인원수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는 최대 인원수를 유지하도록 규정하는 강력한 정치적 압력을 필요로 한다” 라고 말한다.

스톡홀름시 교육감인 올레 부렐은 시는 반드시 법령을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는 (로타 에드홀름의 법제화 주장은) 전혀 가당치 않으며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쟁화

일 뿐이다"라고 말한다.

그는 공립학교에는 아직도 그룹별 아동 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스톡홀름시는 법령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더 명확하고 높은 수준의 포부를 가질 여력이 있다고 말한다.

올레 부렐은 "우리는 좋은 선례를 남겨야 하고, 스톡홀름시의 유치원을 위한 높은 수준의 기준을 수립해야만 한다. 그것이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다"라고 말한다.

그는 그가 사립유치원의 대표들과 잦은 접촉을 하고 있으며, 그들이 양질의 유치원을 만들어 가는데 공헌하고자하는 열망이 있다는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한다.

올레 부렐은 "그들은 가이드라인에 무엇이 있는지에 얽매여 있지 않다, 그러나 그들은 스톡홀름의 유치원에 있는 아동과 그들의 부모들이 높은 스탠다드에 익숙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관련통계에 따르면 2014년, (스톡홀름시의) 학급별 아동 수는 사립, 공립 모두 평균 14.9명이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이다. (스톡홀름시의) 교직원 중 정교사 비율은 사립에서는 24%, 그리고 공립에서는 31%였다. 전국적으로 이 비율은 28%에서 46%에 이른다.

스웨덴 뉴스사이트 Dagens Nyheter (DN) 2015년 11월 26일자
기사출처:http://www.dn.se/sthlm/maxtak-for-barn-tas-bort-pa-forskolor/

교사

1. 어린이집/유치원 원장들도 교장 직무 연수를 받아야

어린이집/유치원 원장들도 학교 교장들이 받는 "교장 직무 연수"와 동등한 연수에 참가해야 한다.

어린이집/유치원 원장들도 학교 교장들과 같은 연수를 받을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는 교육부에 어린이집/유치원 원장들이 받을 수 있는 기본 연수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연수 프로그램은 대학 학점으로 5학점에 해당한다.

녹색당 소속 교육부 장관 구스타프 프리돌린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이는 학교 교장들의 "교장 직무 연수"와 동등한 것입니다. 어린이집/유치원 원장들은 지금까지 "주임교사 직무 연수"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까지 "교장 직무 연

수"에 참가할 기회를 갖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현재부터 변화를 주고자 합니다.

이러한 후속 직무 연수는 경영이나 리더쉽과 관련된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어린이집/유치원 원장들이 그들의 교육적 리더쉽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목표는 국내 어린이집/유치원 간의 형평성을 증진하고자 하는데에 있다.

이번 가을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원장들은 정부가 지정한 대학교에 연수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지난 봄, 어린이집/유치원 원장들이 학교 교장들과 동등해 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있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유치원 원장들도 "교장"이라는 직위를 갖게 되기 때문에 학교 교장들이 의무적으로 받는 연수에 참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스타프 프리돌린에 의하면,

- 나는 어린이집/유치원 원장들이 학교 교장들과 동일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있음을 알고 있으며, 이번과 같은 노력은 그러한 합의를 향해 한 걸음 내딛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유치원 원장이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를 어떻게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고, 그것이 현재 우리가 노력을 쏟고 있는 부분입니다.

스웨덴 일간지 Lararnasnyheter 2015년 6월 18일자
기사출처:http://www.lararnasnyheter.se/lararnas-tidning/2015/06/18/chefer-forskolan-far-lyft

2. 취학 전 교육기관 교사들의 자연과학 기피

자연과학은 취학 전 교육기관 커리큘럼의 일부이다. 그러나 자연과학 교육이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상당부분 개별 교육기관과 교사들에게 달려있다.

커리큘럼에서는, 취학 전 교육기관에서의 자연과학 교육이 단순히 가을 낙엽이나, 개미집이나, 혹은 봄 꽃 등을 관찰하는 그 이상이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취학 전 아동들에게 분자나 마찰과 같은 개념을 소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그러한 목표를 향함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교사들 스스로가 물리, 화학, 그리고 생물과 같은 주제에 대해 종종 자신 없어 한다는 것이라고 외레브로 대학의 생물학과 교수인 보딜 순드베리는 말한다.

순드베리 교수는 취학 전 아동의 과학 실습에 관한 연구팀의 일원으로, 1000여명의 취학 전

교육기관 교사들로부터 응답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순드베리 교수는 많은 취학 전 교육기관 교사들이 스스로 과학교육을 받고 싶어 할 거라고 말한다. 그러나 순드베리 교수는 중요한 열쇠는 접근법에 있다고 믿는다. 만약 교사들이 그들이 다룰 수 없는 주제를 기피하는 대신, 아동들과 함께 정답을 찾아가려 한다면 그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순드베리 교수는 연구 설문 응답 중에 교사들이 아동의 호기심을 자연스럽게 강화해 주는 좋은 예를 들어 보인다. 그 예는 외레브로의 팔레트 유치원으로, 그 곳에서는 아동들이 뼈에 관한 자신만의 책자를 만들어 보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팔레트 유치원의 직원인 예니 크라스와 에비스 마그누손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호기심을 기반으로 하는 접근법은 이미 아동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아동들이 무엇인가를 탐구할 때를 보면, 이는 실제로 과학적인 작업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웨덴 라디오 방송 Sverigesradio 2015년 8월 25일자
기사출처:http://sverigesradio.se/sida/artikel.aspx?programid=406&artikel=6239357

3. 유치원 교사들은 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지식을 쌓게 될 것

이제 유치원 교사들은 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지식을 쌓게 될 것이다. 또한 아동들은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스웨덴 범죄 피해자 보상 및 지원 기구 (The Swedish Crime Victim Compensation and Support Authority)에 교사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것을 위임하였다.

스웨덴 범죄 피해자 보상 및 지원 기구의 기관장인 아니카 어스터는 “목표는 장기적으로 보아 더욱 취약한 아동을 돕는 것이다. 아동은 성인들이 그들의 취약함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교사들은 범죄 피해아동을 식별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스웨덴 범죄 피해자 보상 및 지원 기구는 지난 정부에 위임받아 jagvillveta.se (I want to know) 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해당 웹사이트에서는 4세에서 7세 아동들이 그들의 권리가 무엇이고 또 어떠한 것들이 범죄인지를 배우게 된다. 가장 어린 연령층의 아동을 위해서는 게임을 통해 어떻게 다양한 전문가들이 그들을 도울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인 스티나 뷜센과의 합작을 통해 아동도서 “Little”을 출간하였다. 스웨덴 범죄 피해자 보상 및 지원 기구는 “Little”을 유치원, 사회 복지 사업 기관, 여성 쉼터, 아

동 병원과 같은 곳으로 25,000부를 발송하였다.

이민 및 정의 부처 장관인 모건 요한슨은 “범죄 피해를 입은, 혹은 범죄를 목격한 아동과 청소년들에게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의 필요를 반영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책자 “Little”은 매우 중요한, 그리고 아마도 꺼내기 어려운, 아동과의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한 방안이다. 이번에 새로 개발하는 가이드가 유치원 교사들이 그러한 대화를 함에 있어 중요한 지원책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한다.

책자 “Little”과 “I want to know” 사이트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스웨덴 범죄 피해자 보상 및 지원 기구는 이번에 유치원 교사를 위한 교사가이드를 개발하도록 위임받은 것이다.

울프 예페는 “이번 신규 계약을 통해 우리는 유치원 교사들의 범죄 피해 아동에 관한 지식을 함양하는 웹기반 트레이닝을 개발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책과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하여 교사들이 아동 그룹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에 대한 자료도 개발할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이 과제는 옴부즈만과의 상의를 통해 수행될 것이며, 정부에 2016년 10월 1일까지 제출될 것이다. 스웨덴 범죄 피해자 보상 및 지원 기구는 이 과제를 위해 225만 크로나 (한화 3억원 상당)를 지원 받았다.

스웨덴 뉴스 사이트 Brottsoffermyndighet 2015년 10월 8일자
기사출처:http://www.brottsoffermyndigheten.se/nyheter/pedagoger-i-forskolan-ska-fa-mer-kunskap-om-brottsutsatta-barn

4. 유치원 교사들의 이직

2009년부터 대략 8,000여명의 유치원 정교사 및 레크레이션 활동 교사들이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였다. 교원조합 (Lärarförbundet) 조합장인 요한나 야라 오스트란드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말한다.

스웨덴 통계청은 2009년부터 얼마나 많은 수의 교사들이 일을 그만두었는지를 조사했는데, 이에 따르면 거의 14,000명에 이르는 유치원 교사 및 레크레이션 활동 교사들이 직장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많은 수의 교사들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남아 있기는 하지만, 2009년에 재직 중이던 68,188명의 교사들 중에서 8,000여명에 해당하는 교사들이 타직종으로 이직하였다.

마리아 엘름은 스톡홀름시의 공립 유치원에 재직했었다. 이 후 그녀는 재직 중 경험을 묘사하기를, 항상 진이 다 빠지곤 했고 또한 고용주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다고 말한다.

마리아 엘름은 현재 인사팀에서 일하는 컨설턴트가 되기 위하여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녀의 말을 빌리자면, 그녀는 아프지 않고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찾고 싶다고 한다.

“더 많은 수의 교사들을 현장에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는 작은 수의 아동 그룹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유치원 그룹 별 아동수의 상한을 규정해야 합니다. 주요 업무 이외의 기타 업무들은 없어져야 하고, 따라서 (기타 업무를 담당할) 타 인원들을 추가로 고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활동을 계획할 시간이 협회의 단체 규약에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고용주들은 건강/안전 규정을 충실히 따라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마리아 엘름은 말한다.

그녀는 그녀의 보수가 좋은 편이었다고 말하며, 항상 급여수준이 교사들이 직장을 떠나는 주요한 원인인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근무환경 역시 동일한 수준의 중요한 원인이다.

교원조합의 조합장 요한나 야라 오스트란다는 교사의 수가 레크레이션 센터나 유치원과 같은 교육 현장의 수요를 충당할 충분한 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현장을 떠난 많은 교사들이 유감스러워 하는데, 이는 그들이 충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년에 걸쳐 이러한 부분에 대해 경종을 울려왔습니다.” 라고 말하며 요한나 야라 오스트란드는 말을 이었다.

“교사들은 평균 일주일 중 하루는 그들의 주요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일들에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들은 아동을 위한 활동을 준비하는 시간은 충분하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러한 유치원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있고, 유치원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금전적 투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나 야라 오스트란드에 의하면, 이는 매우 시급한 문제이다. 그녀는 그녀와 교원조합이 매주 마주해야 하는 걱정거리 - 즉, 유치원과 레크레이션 센터의 교사가 부족하다는 것 - 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어떤 유치원에는 심지어 정교사가 단 한명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요한나 야라 오스트란드는 “그래서, 교직원들과 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유치원 운영을 유지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정치인들은 유치원에 사용되어야 할 비용을 아끼려고 하는데, 이는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선 많은 수의 유치원 교사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 교사들의 병가 비율은 매우 높으며, 그들은 그들이 직무를 완수하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받고 있습니다.”

스웨덴 일간지 Lararnasnyheter 2015년 12월 7일자
기사출처:http://www.lararnasnyheter.se/forskolan/2015/12/07/forskollarare-byter-karriar

기타 북유럽: 스위스

1. 야간 어린이집 개원을 원하는 제네바시

밤에 아이들을 돌봐줄 곳을 찾는 야간 근로자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새로 선출된 시의원들은 일반적인 시간에 일하지 않는 가정을 위해 야간 보육원 개원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행정관인 에스더 알더는 꺄레베르지역을 염두해 두고 다음 시의원총회에서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

진보성향의 시의원 삐에르 고띠에는 “2009년부터 시작된 검토가 아직도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고 말한다. 그리고 “우리는 야간 보육원을 위해 근무시간이 연장된 100명의 시경찰 인원을 확충했다. 그들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사회당 로헝스 펠만 리엘 의원도 프랑스의 경우를 예를 들며 열의를 보이고 있다. 현재 파리에는 하나의 야간 보육원이 운영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꺄레베르에 야간 보육원을 개원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소음 문제로 인해 계속 늦어지고 있다.

저녁시간과 이른 아침시간에 아이를 맡기고 싶어하는 부모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2016년부터는 대학의료센터의 보육원은 운영시간을 늘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스위스 뉴스 TDG 2015년 10월 1일자
기사출처:http://www.tdg.ch/geneve/actu-genevoise/ville-veut-creer-creche-nuit/story/15863526

기타 북유럽: 벨기에

1. 10명 중 4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1500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일간지 Le Soir와 프랑스어권 벨기에 방송연합 RTBF가 실시한 조사에서 만 3세 미만 아이들 10명 중 6명이 일상적으로 보육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 대상인 부모들의 63%가 그들의 (만 3세 미만) 아이들을 일 주일에 하루 이상 보육기관에 맡긴다고 답했다. 그리고 보육원을 이용한 기간이 5주가 되지 않은 비율이 50%로 나타났다. 이는 유럽연합이 조사한 벨기에의 보육기관 이용비율인 30-40%를 웃도는 결과이다.

그 외에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0에서 10까지 선택할 수 있는 문항에서 두 명 중 한 명이 8에서 10을 선택했다.

그렇다면 보육원에 아이를 보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3분의 1의 부모들은 보육원에 아이를 보내려 했지만 자리가 없었다고 답했고, 나머지 3분의 2는 구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조부모가 아이의 보육을 담당하는 경우가 39%였고 그 외의 경우에는 부모 중 한 명이 다른 직업 없이 집에서 아이의 보육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들은 일을 그만두지 않고 아이를 보기 위해서는 보육원에 아이를 맡겨야만 하기 때문에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일간지 Le Soir 2015년 12월 3일 자
기사출처:http://www.lesoir.be/1059424/article/actualite/belgique/2015-12-02/pas-creche-pour-quatre-jeunes-enfants-sur-dix

2015년도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목록 및 조회 분석

연구소 홈페이지 탑재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총 탑재 동향 정보: 75편 ('15.12.30 기준)〉

번 호	국 가	제 목	등록일	조회수
1	독일	영유아교육의 중요성	'15.03.18	1379
2	미국	듀크대, Pre- K 프로그램의 장기적 효과 입증	'15.03.18	1392
3	일본	나가노현, '신슈(信州)형 자연보육' 도입	'15.04.02	696
4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민, 보육비용 직접지원보다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를 더 선호	'15.04.02	758
5	프랑스	아이에 대한 신체적 체벌: 비판받은 프랑스법	'15.04.02	766
6	프랑스	입양: 점점 줄고 있는 입양 승인요청	'15.04.02	826
7	미국	유치원(만5세)과 유치원 준비과정(만4세) 혼합반 제도가 직면한 어려움	'15.04.02	1076
8	미국	중산층 가정 대상 "보육료 지원" 거의 없다	'15.04.02	867
9	독일	육아보조금 정책이 육아정책을 망치고 있는 실정	'15.05.12	672
10	스웨덴	아빠를 집에 있게 하라!	'15.05.12	670
11	일본	인정어린이원 보급 추진	'15.05.12	692
12	프랑스	어린이집 자녀를 지켜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15.05.12	791
13	프랑스	지원금 증액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	'15.05.12	835
14	미국	유치원 교사 양성: 인원은 많으나 재정이 부족	'15.05.12	576
15	일본	야마구치현, '생후 2주간 건강진단'으로 신생아와 산모의 심신 지원	'15.06.11	453
16	스웨덴	유치원에 목적을 수반하지 않은 자유놀이가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드러나	'15.06.11	526
17	미국	국가 보고서: 어린이집 지출과 등록이 놀라운 수준으로 올랐다	'15.06.11	639
18	미국	대근육활동이 부족한 아이들	'15.06.11	936
19	캐나다	44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앨버타주 신민당 정부, 보육 및 교육 예산 증액	'15.06.11	612
20	일본	가고시마현 아이라시, 육아지원 확충. 0~5세 아동 증가에 대응	'15.07.08	462
21	스웨덴	취학전 교육기관의 그룹별 과다 인원이 아동의 학습을 방해	'15.07.08	593
22	미국	시카고 어린이집, 부모참여가 중요	'15.07.08	680
23	캐나다	맞벌이부부의 비율, 1976년~2014년 동안 두 배로 증가	'15.07.08	638
24	일본	에히메 현, 중학생 대상 부모교육 실시	'15.08.11	356
25	스웨덴	어린이집/유치원 원장들도 교장 직무 연수를 받아야	'15.08.11	435

번 호	국 가	제 목	등록일	조회수
26	스웨덴	금일부터 보육료 상한선 인상	'15.08.11	414
27	미국	왜 미 해군의 유급 출산휴가가 중요한가	'15.08.11	401
28	캐나다	보수당 정부, 30억 달러에 달하는 종합육아혜택(UCCB) 지원금 일괄 지급	'15.08.11	520
29	프랑스	어린이집에 아이를 늦게 데리러 오는 부모에게 5유로의 벌금 부과	'15.08.11	543
30	프랑스	아이들 보육에 더 많은 예산 투입	'15.08.11	518
31	일본	나가노 시, 정기 응원 메일로 출산과 육아 정보 제공	'15.09.09	312
32	일본	와카야마 시(和歌山市), 육아 지원 어플리케이션 개발	'15.09.09	328
33	스웨덴	취학 전 교육기관 교사들의 자연과학 기피	'15.09.09	330
34	미국	더 나은 교육을 위한 영유아 건강에 초점 맞추기	'15.09.09	345
35	캐나다	교과연수일(Ped-day)의 학교내 보육시설 이용 요금 인상 예상	'15.09.09	272
36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 자유당 대표, 새로운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 계획 발표	'15.09.09	599
37	프랑스	대부분의 부모들 자신들이 이용하는 보육시설을 추천	'15.09.09	392
38	프랑스	어린이집, 육아보조를 비롯한 어린 아이들을 보살피는 데에 드는 비용	'15.09.09	480
39	일본	오사카 마쓰하라 시 다자녀 가정에 만 엔 쿠폰 혜택	'15.10.12	221
40	일본	치바현, 이쿠맨(육아맨) 지원 분위기 확산	'15.10.12	258
41	스웨덴	비독성 (nontoxic) 유치원을 향한 한 걸음	'15.10.12	229
42	미국	증가하는 보육료, 경제의 일부인 보육시설	'15.10.12	264
43	스위스	야간 어린이집 개원을 원하는 제네바시	'15.10.12	224
44	프랑스	여전히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어린이집 건설	'15.10.12	371
45	캐나다	노스웨스트 준주, 퀘벡주 방식의 보편적 보육 실시에 연간 2천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15.10.12	567
46	캐나다	보육 관련 전문가들, 퀘벡식 보육 프로그램의 부정적 결과에 초점을 둔 최근 연구결과에 의문 제기	'15.10.12	354
47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 아동상담소와 현 경찰이 아동학대 대비 훈련	'15.11.16	134
48	일본	치바현, 한부모 가정 자녀의 학습지원 확충	'15.11.16	153
49	스웨덴	유치원 교사들은 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지식을 쌓게 될 것	'15.11.16	132
50	독일	형제서열관계 연구	'15.11.16	113
51	독일	독일에서는 육아와 커리어를 병행할 수 없어	'15.11.16	153
52	캐나다	총선 압승 자유당 정부, 기존 육아수당지원제도를 캐나다 아동수당 하나로 통일 예정	'15.11.16	214
53	프랑스	부모가 일하는 시간에 따라 어린이집이 운영된다면?	'15.11.16	255
54	프랑스	아이를 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맡길 때 지원받는 것들	'15.11.16	245
55	미국	메사추세츠의 5개 도시, 종일제 어린이집 지원금 수령 가능	'15.12.04	123
56	일본	결혼과 육아 '좋아요!' 페이스북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	'15.12.10	39

번 호	국 가	제 목	등록일	조회수
57	일본	손자, 손녀를 위해. 조부모 육아휴직제도 등장: 기업이 도입, 지자체가 지원	'15.12.10	74
58	스웨덴	유치원 반별 최다 허용인원 폐지	'15.12.10	75
59	미국	워싱턴 보건복지부의 "신생아 동반 출근" 정책 시행	'15.12.10	67
60	미국	여성-영유아 영양 보조 프로그램(WIC Program)의 변화: 더 많은 선택권과 편리함	'15.12.10	65
61	캐나다	신민당 주도 매니토바 주정부, 신민당의 연방선거 참패에도 '보편적 보육접근권 실현' 공약 이행	'15.12.10	58
62	캐나다	보육서비스, 사회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학업성취	'15.12.10	66
63	프랑스	아이를 돌보는 것,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골치 아픈 일	'15.12.10	70
64	프랑스	우리 아이의 보육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	'15.12.10	116
65	독일	가정내 보육 지원비: 누가 이용하고, 얼마인가	'15.12.10	127
66	독일	쇼이블레 보육 지원비를 유치원에 지출하지 않을 계획	'15.12.10	127
67	일본	유아 교육 무상 확대. 저소득층 셋째 아이부터 전액 지원	'15.12.28	18
68	일본	육아지원을 위한 주택보조금 지급, 내년 1월부터	'15.12.28	16
69	미국	교육매체를 이용한 수학 학습 지원(PEG+CAT)	'15.12.28	16
70	미국	2015년 미국 유아기 5가지 주요 쟁점	'15.12.28	19
71	캐나다	캐나다 주요도시 보육비용 급격히 상승: 영아보육료 도시간 격차 최대 월 1,562달러에 달해	'15.12.28	17
72	프랑스	파리 : 비상시를 위한 어린이집에 만족하는 부모들	'15.12.28	19
73	벨기에	10명 중 4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15.12.28	36
74	독일	"부모들의 기회는 어린이들의 기회" 주정부 프로그램의 최종 평가 보고서	'15.12.28	32
75	스웨덴	유치원 교사들의 이직	'15.12.28	41

국가별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탑재 수

지역	국가	탑재 정보 수
합 계		75
아시아	일본	15
미주	미국	15
	캐나다	12
북유럽	프랑스	14
	독일	7
	스웨덴	10
	기타 북유럽	2

최다 조회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1-5순위

순위	국가	제목	조회수
1	미국	듀크대, Pre- K 프로그램의 장기적 효과 입증	1392
2	독일	영유아교육의 중요성	1379
3	미국	유치원(만5세)과 유치원 준비과정(만4세) 혼합반 제도가 직면한 어려움	1076
4	미국	대근육활동이 부족한 아이들	936
5	미국	중산층 가정 대상 “보육료 지원” 거의 없다	867

주제별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분류

주제	국가별 해당 주제 수							합계
	아시아	미주		북유럽				
	일본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	기타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및 정책 (예산·지원·재정·시설)관련	2	4	5	6	2	1	2	22
교육 및 보육 비용		1	3	2	1	1		8
육아지원 관련 (임신, 출산, 휴직, 보조금 등)	7	3	1	2	1			14
일·가족 양립 정책 (양성평등, 취업모 등)	2	1	2	1	1	1		8
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		4	1			3		8
교사		1				4		5
취약계층 양육지원	2							2
아동 인권·삶의 질·미래 및 기타	2	1		3	2			8
합 계	15	15	12	14	7	10	2	75

2015 해외 육아정책동향 정보자료집

발행일 2015년 12월
발행인 우남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06750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경성문화사 02) 786-2999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2015년도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자료집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전화 02-398 7700 팩스 02-730-3313